

탄소중립과 기후환경을 만들어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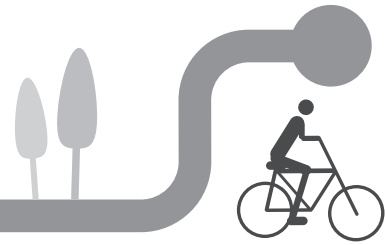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시민정책 제안집

2022. 04. 21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사)생명평화마중물 | (사)전북생명의숲 | (사)푸른전주 |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 더귀하게
덕진노인복지관 | 덕진지역자활센터 | 비글구조네트워크 | 생태교육센터 "숲터" | 생태교통시민행동
시민행동21 | 어독스 | 에코올림사회적협동조합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전북YWCA협의회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 전주시니어클럽 |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사회혁신센터 | 전주시에너지센터 |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정책제안 목록



1.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1-1 전주시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09
1-2 전주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1-3 탄소중립 노인일자리 창출제안	13

2.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2-1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추진체계 강화	17
2-2 성장을 관리하는 도시계획 제안	19
2-3 지역 단위별 성장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 특화전략 “생활권계획 수립”	21
2-4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권고문 존중과 종합경기장 재생 종합적 검토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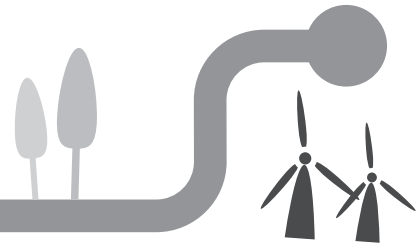
3. 대중교통 활성화

3-1 버스-자전거-보행이 연결되는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29
3-2 대중교통 공영제 도입을 통한 운영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	31
3-3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 도입	32
3-4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전주	33

4. 쓰레기 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로

4-1 우리동네 자원순환 거점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37
4-2 영농폐기물 수거 시스템 구축 및 농산어촌 자원순환 마을 확대 조성	41
4-3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없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44
4-4 사업장 쓰레기매립 소각 발전 처리시설 공공성 확대 제도화	48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정책제안 목록



5. 도시의 심포 녹지와 도시공원

5-1. 전주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53
5-2. LH의 가련산 아파트 건설 계획 중단	56
5-3. 이해충돌 배제하는 제도 도입 및 도시공원시민협의체 구성	58
5-4.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60
5-5. 가로녹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호수·노거수의 관리 강화	61
5-6. 정원도시 사업의 지속 및 유지관리 활동지원 그린 일자리 확대	62

6.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6-1. 전주천 국가하천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수생태계 개선	67
6-2.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69
6-3. 에코시티 백석저수지,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세대의 생태공원 조성	73
6-4. '야생동물보호구역' 확대와 도시생태 현황지도 활용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	75

7.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7-1.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 실현	81
--	----

8. 기후위기환경교육

8-1. 환경에 대해 알고 해결하고 누리는 시민을 위한 기후위기 환경교육	87
--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정책제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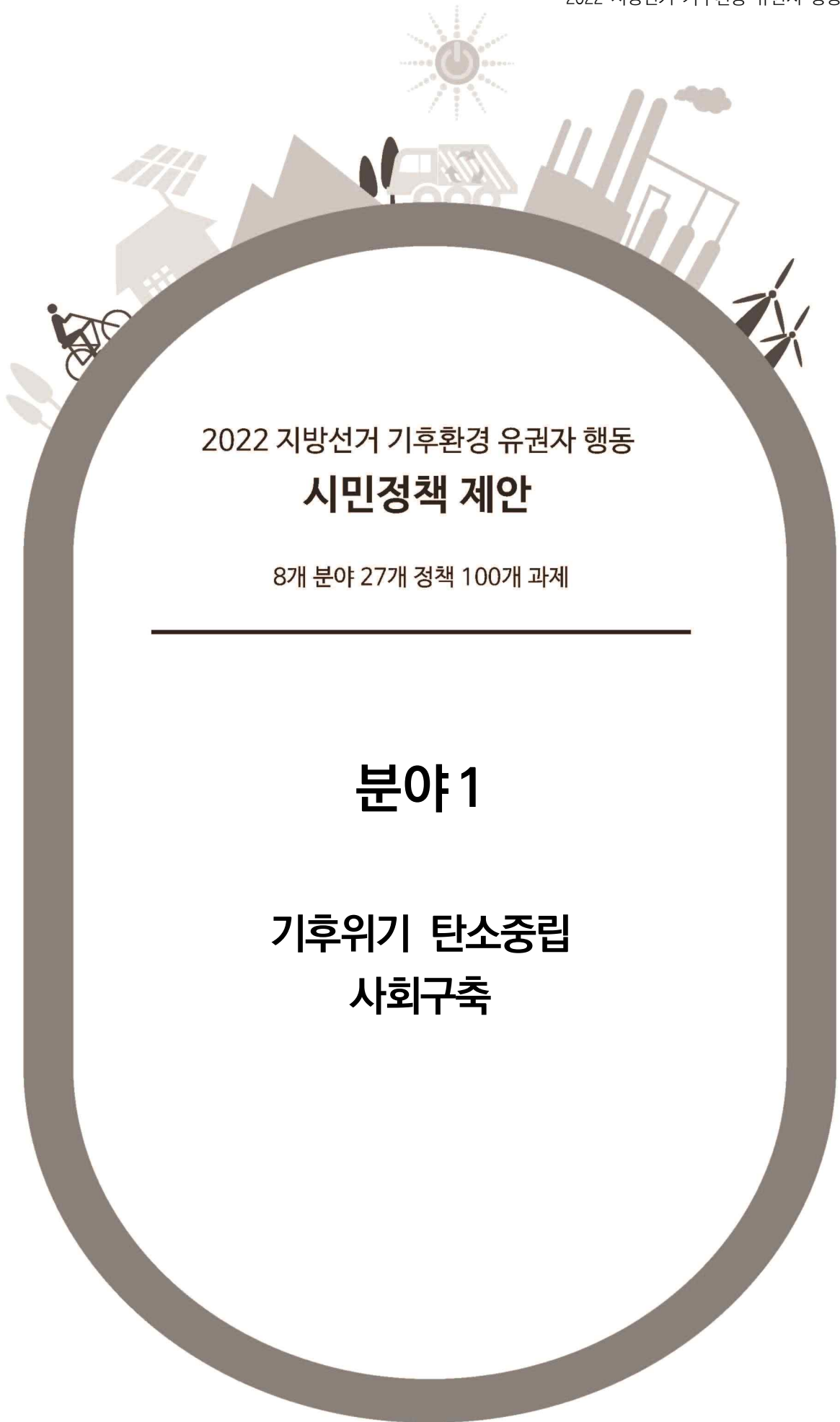


9. 유권자 제안 정책

9-1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제로웨이스트화 추진	91
9-2 재생에너지 친화기업(업체) 인증제 도입	92
9-3. 돼지카드와 탄소포인트의 만남	93
9-4. 도심형 태양광 확대	94
9-5. 기후위기 환경권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제도화	95
9-6. 기후위기 정기 포럼	96
9-7. 전북형 환경교육 정규과목 의무화	97
9-8. 그린 전주투어 활성화를 위한 “전주버스 탄감 토큰”	98
9-9. 지역 로컬푸드 무포장 시도 및 자원순환 시스템 제도화	99
9-10. 로컬푸드 포장지 분리수거 쉬운 관리	100
9-11. 시민의 도시공원 생활화	100
9-12. 기후시계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기후위기 대응	101
9-13. 5살부터 환경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103

※ 활동개요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활동개요	106
부록1.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110
부록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워크숍 및 시민정책 공모	115
부록3.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시민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116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 1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정책	1-1 전주시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목표	- 지구적 탄소중립 목표에 상응하는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 계획 수립 - 탄소중립 이행과 점검을 위한 체계구축 및 안정적인 자원 마련
제안 배경	- 국가 탄소중립 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상향 설정 - 전라북도 시민사회는 전북의 감축목표를 2025년까지 30% 감축으로 제안, 전북지역내 배출량 비중이 높은 전주시의 보다 강화된 목표수립과 달성전략 필요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공약 제안	1) 전주시 탄소중립 목표설정 및 달성 시나리오 작성 2016년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이전의 계획으로 기후변화의 악화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 따른 계획으로 조정 보완 필요 - 시민참여를 통해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로드맵 필요 2) 전주형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및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설립 - 중앙정부의 시책보다 앞서 에너지분야 사업을 추진한 전주 지역역량을 고려하여 전주형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한 표준조례의 단순적용은 전주시 현재 추진 역량을 전국적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시킬 우려가 있음 -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을 점검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설립 필요 - 행정의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 학교, 민간시설 등의 참여 확대 3) 탄소인지예산 및 기후영향평가 도입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체계 구축 - 전통적인 에너지분야 시책 추진만으로 2050 탄소중립 불가능,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술 필요 - 탄소인지예산 및 기후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찾아내고 다량배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전환 방안 준비 필요 <탄소인지예산제도 관련 현황> 탄소인지예산제도는 법적 의무 사항임.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회전반의 대전환 과정에서 저탄소형 새로운 일자리 다량 만들어 질 것임

	4)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탄소중립센터 운영 ▪ 중앙정부는 전체 예산 대비 0.4%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기로 함 ▪ 전주시도 에너지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하고, 전체 예산의 0.5%를 기금으로 조성, 순수 탄소중립 예산으로 사용토록 함 ▪ 탄소중립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양성, 민간참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 이미 운영중인 전주에너지센터와 탄소중립센터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5)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주시 행정 조직 개편 ▪ 1안 : 전주시장 정무보좌관(3급)을 기후환경일자리 보좌관으로 개편 후 관련 업무 총괄 - 현 시장 직속으로 대외협력 업무 등 정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정무보좌관 직제를 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기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 직속 기후환경일자리 보좌관을 둬. ▪ 2안 : 기후 환경 생태 에너지 도시계획 관련 부서 통합 조직개편 - 현재 전주시 기후변화정책 업무 전반은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해당 과에서 기후변화탄소중립팀, 에너지관리팀, 그린뉴딜팀(직제만 편성), 미세먼지대응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업무 범위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생태도시국,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 걸쳐 있어, 이를 총괄하는 국단위 직제를 신설하고 연관 부서를 총괄하는 형태로 개편이 필요함. ▪ 전주시 환경교육팀 신설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는 환경교육팀(계) 직제 운영 - 시민을 대상을 기후위기, 자원순환, 생태보전,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일상적인 생활밀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팀 신설 - 전주시 환경교육 통합 관리와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기대 효과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전주시 구현 ▪ 탄소중립의 안정적 재정 확보로 전사회적인 녹색대전환 가속
근거 출처	▪ 전라북도 녹색전환보고서(2022년 4월-녹색전환연구소)
문의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소영 사무국장(☎063-281-2959 / 010-8078-5002)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정책	1-2. 전주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목표	- 전주시 재생에너지 생산량 50% 확대 - 전주형 시민햇빛발전 지원제도 운영으로 민간 태양광 활성화
제안 배경	- 전주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중간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선언 -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77%(2017년 기준)가 에너지 부문 배출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 국가를 넘어 세계적 탄소중립의 실질적 과제 - 전주시 에너지자립률은 2019년 기준 11%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방법 모색으로 확대가 필요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공약 제안	1)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확대 가능한 재생에너지 지 검토, 유형별 달성 목표와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2)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 태양광설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도시계획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 이격거리 설정의 합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이는 태양광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저평준화 - 민간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 3) 공공 유휴부지 공개 임대를 통한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 공공 유휴부지의 태양광발전 적합 여부 검토(구조안전진단, 개발행위허가 등) 후 시민참여 에너지 생산 조직에 공개 임대 - 민간자본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내에서 순환되는 구조 마련 - 신재생에너지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에서 추진 중 4)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발전차액지원 제도 운영 -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대상 지원금 지급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산 기여 - 서울시는 1kWh당 100원, 5년간 지급하며,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 하여 지원 5) 도시재생 대상지,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태양광 설비용량 충족 - 신재생의무할당비율에 맞춘 태양광 설비용량이 아닌, 건축물의 컨디션에 따라 설비가 가능한 최대 용량의 태양광 시설 설치 의무 - 공공재정 투입이 어려울 시, 민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여 민간 참여 확대

	6)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비 차액 지원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시 건축물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요소를 높인 경우, 기존의 시설비보다 추가로 소요된 차액 지원하여 도심 태양광의 다양한 사례 확보, 시민 수용성 높임 ▪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곡선형 구조 등 다양한 경관 일체형 태양광 설비 지원
기대 효과	▪ 행정에서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시민 수용성 확대 및 민간 자본 투자, 시장 활성화로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확대
근거	▪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토론회 자료집(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2022.03.30.)
문의	▪ 전주시에너지센터 최우순 센터장(☎063-905-4103 / 010-2051-9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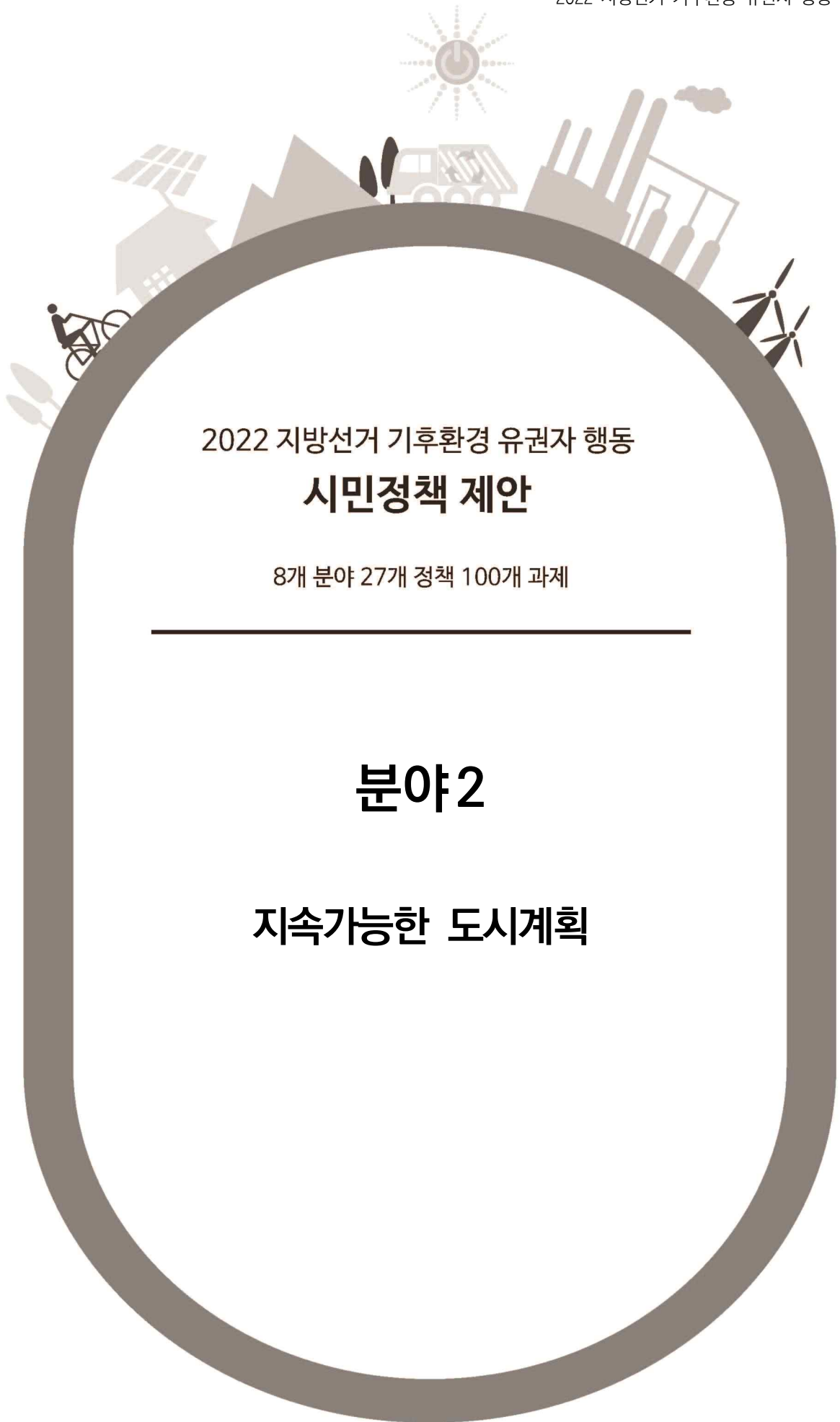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정책	1-3 전주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 탄소중립 실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구적 탄소중립 목표에 상응하는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지원 - 탄소중립 실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정적인 재원 마련
제안 배경	- 국가 탄소중립 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상향 설정 -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개발을 통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운영 활성화 - 단순환경정화 활동에서 벗어난 전문적 노인 일자리 발굴 필요성 증가 - 탄소중립 및 ESG경영을 접목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및 지역 내 기업의 ESG경영 실천 필요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공약 제안	1) 전주시 탄소중립 목표설정·달성을 위한 실천(안)으로 그린노인일자리 창출 설정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천(안)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린노인일자리 창출 설정 - 그린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참여를 통해 목표달성 및 탄소중립 실천 홍보 -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개발 필요 (수행기관과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그린노인일자리 창출 필요) 2) 전주시에 맞는 전주시 그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 전주시 맞춤형 그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연구 및 실태조사 필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그린 노인 일자리 진행은 탄소중립실천이라는 그린 노인 일자리의 목표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움 - 노인 일자리 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전주시 맞춤형 그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진행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 3) 배정 노인 일자리 중 그린 노인 일자리 실행 비율 지정 - 매년 배정되는 노인 일자리 중 그린 노인 일자리 실행 비율 지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지원 - 그린 노인 일자리 실행 비율 지정을 통한 노인 일자리 내 탄소중립 실천 진행 - 그린 노인 일자리 실행을 위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가능

	4) 탄소중립 시민실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사업 담당자와 참여자에 대한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지원 - 탄소중립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양성, 민간참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 이미 운영중인 전주에너지센터와 탄소중립센터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 탄소중립 홍보의 일환으로 지역시민에게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 콘텐츠 진행 -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탄소중립 실천 그린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 종사자(지역 시민)에게 탄소중립 교육 진행 및 홍보
기대 효과	- 시민(노인일자리참여자)과 행정의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전주시 구현 - 탄소중립의 안정적 실천으로 타지역보다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
근거 출처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침서,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기준
문의	전주시니어클럽 김민아 팀장(☎063-283-6013)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2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정책	2-1. 생태도시 전주를 위한 생태도시종합계획 추진체계 강화 및 이행
목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본은 도시계획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다. 전주시의 생태도시에 대한 방향성과 개발 우선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배경	- 전주는 기후위기 에너지 사용 증가, 식량위기 등으로 위협해지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 위기에 대해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과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중심인 도시계획 추진, 녹지와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생태도시의 가치확대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직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 전주시는 2016년 민관학이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1년 이를 실행할 민관협치기구인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를 출범 운영하고 있다. 민선 8기, 생태도시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공약 제안	<실질적인 생태도시 전주를 위한 정책> 1) 생태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할 실질적인 추진체계 강화 - 민선 8기 탄소중립 도시 전주와 생태도시에 대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 - 현재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생태도시조성팀(2인)의 위상과 운영 규모로는 추진체계 운영이 많이 부족함. 연구보고서 제안 수준의 생태도시 추진단 설치 및 과규모 이상의 행정조직이 요구됨 <출처 : 2016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종합계획 보고서 - 추진체계안> -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과 행정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의 실천성을 높일 수 있음 2)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적용 및 점검 확대 - 전주시 신규 사업 및 재생사업 등은 필수적으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생태도시 5대 목표 및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행정체계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

	- 가이드라인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직장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함 3) 생태도시 실행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전주시는 2021년 6개 분야 실행기구가 참여하는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출범과 함께 “전주시 탄소중립 선언”을 한 바 있음 - 녹지와 하천, 에너지, 생태교통, 도시계획 등의 이슈를 지역 내 활성화하고 시민들과 실천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활동 및 예산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기대 효과	- 생태도시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 등 미래에 대한 안전하며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동시에 이에 필요한 직장과 경제적 활동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기대한다. - 생태도시 5대 목표 및 가이드라인이 사업기획-이행사업-평가 등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환류되는 추진체계의 정착을 통해 전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근거 출처	2016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2017.07.14.) 2021 생태도시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수정 워크숍(2021.07.2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성장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2022.4.08)
문의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태리명희 시민정책연구원 (063-281-2973./ 010-2340-8296)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정책	2-2. 성장관리형 도시계획 수립
목표	- 인구 정체 시기에 외연적 확장을 지양하고 도시 내부로 관리를 집중하는 성장관리형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마련 - 전주시에서도 성장관리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탄소중립적, 환경친화적, 기능 효율적인 도시관리정책을 마련
제안 배경	- 전주시인구는 약 65만규모에서 크게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에코, 만성, 효천, 혁신등 도시 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은 계획되고, 천마지구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문제점을 나타냄 - 기성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 정책과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정책화가 필요함 - 도시 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스마트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공약 제안	<주요핵심 전략> : 도시 외연적 확산을 지양하고 도시 내부(기성시가지)의 토지이용 여건을 향상 1) 복합개발과 고밀개발 Zone 지정 - 기성 시가지 내 조사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상업, 주거, 문화, 업무 등)을 유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고층개발을 유도(가이드라인마련) ▶ 토지이용의 경쟁력 및 차별화, 오픈스페이스 확보, 명소화 2)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 - 공동주택, 주상복합형 주거에서 1인 주택, 레지던스, 공유주택, 청년주택 등 세대별 인구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마련 ▶ 기성 시가지내 인구유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공급 3) 배리어프리 지역지정과 관리 - 공공건축물 주변지역의 일정범위에 대하여 배리어프리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의 도로, 공원 등에 대한 배리어프리계획수립과 정비 시행 ▶ 사회적약자의 생활여건개선, 공공건축과 일체화된 배리어프리 기능 강화 4) 지역 단위의 성장전략 및 특화전략 - 도시내 세부지역(행정동)을 단위로 하는 주민주도형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성을 강조하고, 지역주민의 소속감과 참여감을 높이는 정책 마련

	▶ 생활권계획, 마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 5) 주요 보호 및 보존 자원조사 및 보호정책(기법) 운영 ▪ 기성시가지내 보호 또는 보존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보호하기위한 개발권이양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 및 보존정책으로 인한 사유권피해를 최소화 ▶ 지역자원선정, 지역자원의 관리, 도시의 역사성 및 문화성 유지 6) 개발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평가 ▪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사업, 재개발 등 주요사업지역에 대하여 사업이후(5~10년이후)의 이용자의 만족도, 불편사항,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마련 ▶ 사전 조사를 통한 사회적비용의 절감효과, 향후 유사계획의 기준자료 활용 7) 대중교통프리존 ▪ 인구유입이나 기능집중이 필요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공공교통수단의 이용비용을 무료 또는 절감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 대중교통 무료지역 지역, 해당지역 이용시 버스이용료 50% 감면등 8) 성장관리 도시학교 운영 ▪ 성장관리형 도시계획을 확산하기 위한 인력양성을 지역대학과 공동협약하여 운영 ▪ 학사, 석사과정의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지원 ▶ 도시전문대학, 도시전문대학원 운영 9) 성장관리 도시사업을 위한 공기업운영 및 상임기획단운영 ▪ 성장관리형 사업과 도시계획을 위한 전주시 공기업을 설립운영 ▪ 도시계획, 교통,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전문가, 전문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상임기획단을 운영 ▶ 실행적이고 실천적인 성장관리정책, 전문인력양성, 전문인의 역할기회 마련
기대 효과	▪ 성장관리의 도시정책을 하나의 도시 이미지화, 차별화의 개념으로 활용 ▪ 성장관리의 개념을 다양한 도시정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 ▪ 생태, 문화, 환경, 경제 등으로 분산된 정책을 성장관리라는 대표적 가치로 편집
근거 출처	▪ 성장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정책 만들기 대회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발표자료(2022. 04. 08)
문의	▪ 도시계획협의회 박정원 위원장 (010-3289-3915)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정책	2-3. 지역 단위별 성장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 특화전략 “생활권계획 수립”
목적	1.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하위 관리계획 간의 간극을 좁힘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생활권 중심의 지역자원발굴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 3. 생활권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구체화
배경	-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장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성장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들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그 노력으로 서울시에서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국토부는 현재 공간환경전략계획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전주시도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여 균형 있고, 정주 여건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수립되고 있는 마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과 연동하여 구체적인 지역 특화전략이 필요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생활권계획수립의 제도화 -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및 보완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생활권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2. 마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 마을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마을계획과 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연동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생활권이란 :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인 범위

	<생활권 개념>  (출처: https://planning.seoul.go.kr/)
기대효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주가 추구하고 있는 생태 도시의 구현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확립
출처 및 산출근거	- 2016년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의 쟁점과 개선방향 - 2018년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방향 - 2019년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 발간 - 전주시 생활권계획 수립 준비를 위한 토론회 (도시계획협의회 2021.10.27)
문의	- 도시계획협의회 문요한 시민정책연구원 (연락처 / 010-5099-0654 이메일 / john092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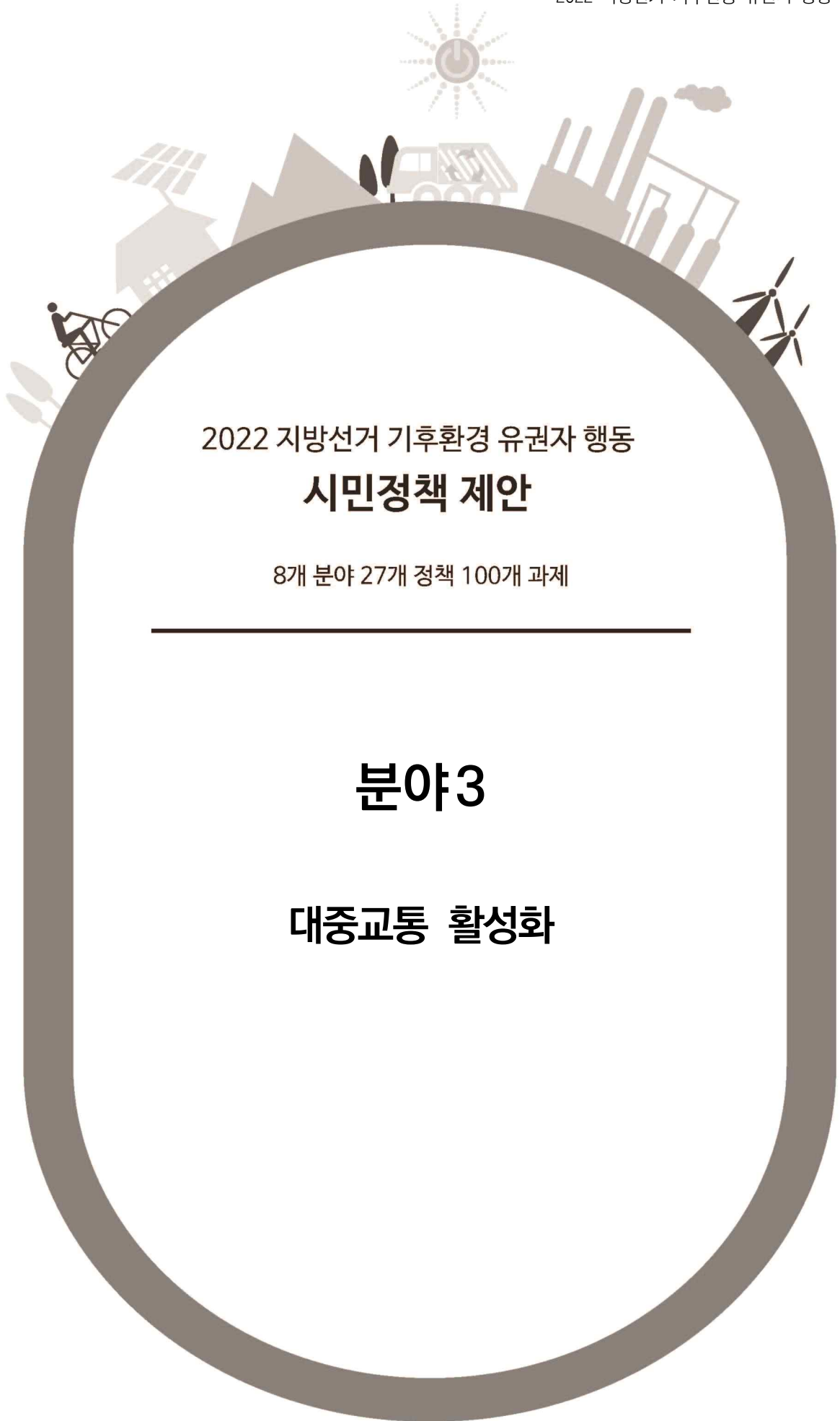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정책	2-4.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권고문 존중과 종합경기장 재생 종합적 검토
목표	■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에 담긴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협약 변경 등을 대한방직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방향을 정함.
제안 배경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고층 타워 계획을 밝혀 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방직 개발 계획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개발 공약을 내놓고 있음. - 1년 반에 걸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부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권고문이 시에 제출되었음에도 사업주인 자광은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안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음 - 전주시는 권고문에 따라 도시계획 사전협상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도변경에 따른 계획이득(토지 가치 상승분)과 개발이익 환수 지침을 작성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 매입(수용) 후 공공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200층 타워,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랜드마크, 디지털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조성, 종합경기장 쇼핑몰 이전 건설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음. 사유지인 토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과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전제로 하는 민간업자의 개발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 시민의 숲'을 포함해 '전시컨벤션과 호텔에 대한 정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관련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방식에 변경에 관한 세부협약 체결)이 났음. 따라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체결한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부지 임대 방식으로 다시 체결해야 함. -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120,715㎡ 부지에 정원의숲, 예술의숲, 놀이의숲, 미식의숲, 마이스숲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5,827억원(재정 1,752억원, 민자 4,0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확정함. 도시숲 조성, 경기장 재생, 문화시설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함. -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공공성을 강조하며 대규모 쇼핑몰 대신 시청사 이전과 행정 허브, 환승센터와 터미널 이전, 도시 숲 공원, 공공 시설 중심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변경으로 행정력과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며, 착공 계획을 유보할 것을 촉구함.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종합경기장 재생사업은 도시개발 측면에서 시설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쇼핑몰, 문화시설, 컨벤션 등 공간계획 수립을 같은 트랙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했으나,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의 토지이용구상과 시설 배치와 시민 의견수렴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여전히 두 시설의 기능이 중첩되고 있음. ■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해서(수용, 환지 등) 공영 개발하는 방식을 사전준비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검토했으나 전주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서 공론화위원회 주요 의제로 다루지 못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공약 제안	1. 1년 반 동안 공론화 절차를 거친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문 및 경기장 부지 재생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 도시전문가: 행정, 기업, 시민 등 대표성을 갖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과정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속의 자료 준비해서 수용성이 높았음. - 단순 찬 반이 아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로 단일 방식이 아닌 다양한 논의를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 공론조사’ 방식으로 이중 설계. -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논의 또한 시민 참여 정책 결정 과정이 반영되어 있음. 2016년 시민원탁회의(시민 500여명)를 통해 사업 선호도와 미래상에 대한 의견수렴과 2020년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 시민참여단 순회 토론회(34회 개최, 참석 687명)’를 통해 추진함. 2.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공간계획을 한 트랙에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 - 옛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의 상업적 기능과 공공시설(컨벤션, 공연장) 기능이 중첩되고,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개발 방향 등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되고 숙고해야 함. - 전주시의 새로운 미래, 즉 제4차 산업혁명 등을 포함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전주시는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하고 바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폭넓고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함. 3. 전략적으로 공공의 부지인 종합경기장의 개발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함. - 옛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의 개발 방향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경우 종합경기장의 개발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고 합리적임. - 종합경기장은 토지가 시 소유이고 개발에 대한 롯데와의 계약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음. - 반면 옛 대한방직부지는 용도변경 등 전주시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조정의 폭이 크고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음. - 자광과 롯데의 특수관계를 염두에 둘 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옛 대한방직 부지 공영 개발 가능성과 현실성 추가 검토 - 사전공론화위원회는 시에 부지매입을 전제로 한 공영개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부지 소유자의 높은 개발 의지로 볼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용도구역 지정과 매입(수용)이나 환지 등 공공개발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함. - 민선 6기, 시는 과거 대한방직에 매도 의사를 타진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으로 녹지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 옛 대한방직부지는 전주시의 금싸라기 땅이고,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공영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민간 개발 방

	식의 활력과 비교해서 경쟁력도 충분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전주시민들이 공공개발을 위한 땅 한 평 갖기가 가능한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5.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반영한 공간계획 보완. 녹지축과 수계축 중심의 탄소흡수원과 도시 바이오툼(생물다양성)을 반영 필요 ■ 건지산, 가련산, 서산으로 거시적 녹지 축이 이어짐. 나비와 꿀벌의 징검다리 가련산은 대상지 바로 서측에 위치함 ■ 전주천, 삼천, 건산천으로 이어지는 거시적 수계 축이 전주시를 관통하여 이어짐. 인접한 하천과 연계해 도심지 내 빗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물순환 체계 구축 ■ 공간 구상에 녹색건축 및 재생에너지 확보, 에너지 효율을 추가 반영해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로 미래형 공간으로 구축 6. 전라중 조건부 에코시티 이전에 따른 연관 개발 검토 ■ ‘전주교육지원청→ 전라중→ 에코도시’ 전북교육청 단계적 이전 확정 ■ 예비 교육감 후보는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원형콘텐츠체험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지로, 이와 연계할 경우 전라중 부지는 미래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미래교육캠퍼스’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레시안 22.3.30) ■ 도 교육청과 이전 비용 협의를 통한 부지 확보로 종합경기장 공간 구성 확대 혹은 종합경기장과 연계한 교육공공시설 계획이 수립 검토해야 함.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는 현재 전라중과 덕진초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보호심의 대상임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덕진 수영장과 체육회관 등 공공시설과 연계
기대 효과	■ 수년째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인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전주시(도)의 도시계획 변경 수립 권한과 사유지라는 특성, 용도변경의 특혜성, 법적인 절차, 도시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함. ■ 도시계획 사전협상운영지침 수립,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재협약 체결,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법과 조례에 따른 개발 계획 변경 수립 반영
근거 출처	■ 성장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토론회(2022.4.8.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 전주시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기본계획)용역(전주시) ■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 활동 백서 및 갈등 조정 사례 발표(전주시)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063-286-7977 / 010-3689-434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3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3-1. 버스, 자전거, 보행이 이어지는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목적	시내버스, 자전거, 도보가 원활히 연계되어 생태교통 이용의 편리성 증대 및 이용자 확산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배경	전주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조례에 따라 2030년까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50%, 자전거수송분담률 10%, 2040년까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70%, 자전거수송분담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생태교통(버스+자전거+도보)의 수송분담률은 2017년 45.1%에서 2021년 40.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5.2%, 자전거는 2.0% 이다. (2021년) 대중교통활성화는 버스노선개편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보행, 자전거, 버스로 연결되는 생태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야만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보행로 정비 및 보행자 전용공간 확보 보행로가 상가 홍보물 및 상품진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인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하며, 승강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 거리마다 보행자들이 쉬거나 향유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자전거 주행의 편리성 위해 전용도로 확보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등.학교) 및 버스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며, 자전거 주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행로가 아닌 도로 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가 필요하다. 3. 도시 외곽 대체주차장 설치로 도심권 내 자동차 접근성 최소화 도심 내 자동차 접근성을 최소화하여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와 원활한 이동을 위해 도심 외곽에 대체 주차장을 설치하고 버스 또는 자전거로 도심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4. 도심 내 자동차 주행속도 제한 도심 내 자동차 접근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심권 진입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20~30km/h 이하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져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출처 및 산출근거	- 전주시지속가능물류체계 기본조례 - 함께타는버스시민연대 2021 총회 - 전주시 사회조사보고서(2017~2021 이동수단 조사결과)
문 의	- 생태교통시민행동 버스행동 정선숙 (연락처 /010-9644-1373 이메일 /ngo4u@hanmail.net)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3-2 대중교통 공영제 도입을 통한 운영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
목적	시내버스 운영을 행정에서 관리하여 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배경	전주시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버스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의 경영은 수송노동자의 퇴직급여조차 제대로 적립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또한 승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대시민 서비스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버스에 대한 민원 증가와 버스 탑승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송노동자의 노동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친절, 안전운전 교육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경영과 관리가 부실한 버스회사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기보다 공영제를 통해 행정에서 집행,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정책제안	1. 시내버스 공영제 공론화 전주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5개 버스회사 중 4개 버스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인 현실을 알리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영제 등 적절한 운영체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2.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시내버스 공영제를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및 대시민 친절 서비스 향상, 안전운전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
기대효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가능
출처 및 산출근거	2021.10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제도 및 운영체제 개선연구. 부경대 산학협력단
문의	- 시민행동21 사무처장 정선숙 (연락처 /010-9644-1373 이메일 /ngo4u@hanmail.net)



대중교통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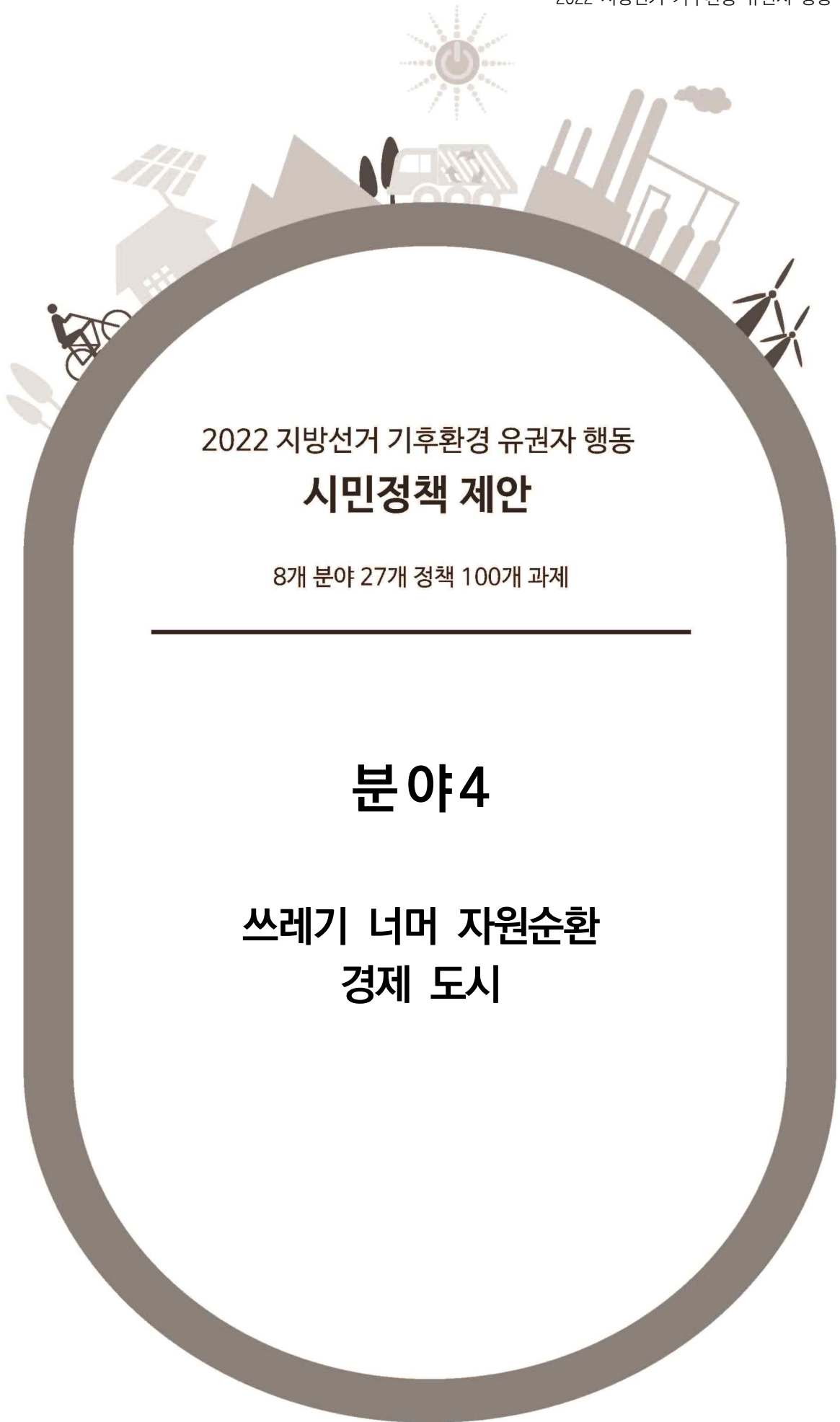
정책	3-3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 도입
목적	무상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배경	전주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대중교통이 부실하면 고령자, 아동, 청소년은 물론 교통 약자들 또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조차 박탈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교통비가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도 한다.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무상교통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 기타
정책제안	1.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주시의 예산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요금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화성시 사례 참고) 2. 청소년, 고령자 버스 요금 무상지원 도입 대중교통 다수 이용 계층인 청소년, 고령자에 대한 버스요금 무상지원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동권을 보장 3. 청년, 일반 성인 버스 요금 무상지원 확대 청년, 일반 성인 등 전체 시민으로 버스요금 무상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탈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이용 확대 및 활성화
기대효과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
출처 및 산출근거	2022. 화성시 무상교통 시행
문의	- 함께타는버스시민연대 집행위원 정선숙 (연락처 /010-9644-1373 이메일 /ngo4u@hanmail.net)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3-4. 자전거 이용에 안전하고 편리한도시 전주
목표	▪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함 ▪ 자전거로 이동에누구나 어려움이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함. ▪ 자전거겸용도로 중심의 전주에서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 중심의 도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 공영자전거의 확대를 통해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
제안 배경	▪ 전주는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을 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0여명이 사고로 1인 9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음 ▪ 자전거를 타는데 도로 여건이 너무 안좋은 상황에 있음. 특히 오랫동안 자전거겸용도로 중심의 정책이 이제는 한계에 있음 ▪ 공영자전거 꽃싱이가 개천을 중심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한정된 시간에 대여가 되고있음. 위치기반의 스마트대여 공영자전거 도입이 필요함 ▪ 탄소중립 2050에 자전거는 가장 부합한 이동수단임.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야 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전주시민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전주시내에 410킬로의 자전거겸용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와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확대해 가야 함. 전주시 공영자전거 꽃싱이가 지정된 장소와 하천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위치기반한 공영자전거 24시간 대여와 운영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탄소중립 2050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자전거이용자 인센티브, 직장 내 자전거 거치대 확대, 샤워실 운영에 지원해야 함
기대 효과	▪ 전주가 자가용 중심의 도심내 이동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전환해 가야 함. 자전거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의 일환이며 탄소중립 2050의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생활 속의 실천이 될 것임.
근거 출처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문의	▪ 생태교통협의회 하갑주 위원장(☎063-281-2973 / 010-7243-5929)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4

**쓰레기 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



쓰레기 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



정책	4-1 우리동네 자원순환 거점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목표	- 적극적인 재활용과 감량을 통한 쓰레기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의 고유한 환경 자원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주민이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관리하므로 전주시 폐기물 선별률을 올리고 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함
제안 배경	-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은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며 미국의 7배, 중국의 11배, 캐나다의 141배에 이른다. 20년 12월 정부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발표 그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 감량기로 함(△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감축, △ 재활용 비율을 2025년까지 70%(현재 54%)로 상향,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30% 감축, △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우리 사회의 쓰레기 문제를 시민들이 나서서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쓰레기 배출 저감과 재활용 분리배출 확대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이해도가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소비, 생태적인 삶 등 환경 이슈에 대한 학생시민교육이 가능한 환경 및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강사를 대거 양성한 후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순환 교육이 필요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동네 자원순환 거점 수거 및 업사이클 공간 구축 - 단독주택지역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깨끗한 재활용품 배출→무게측정→유가직접보상)하여 일반쓰레기의 감량 -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확대 추진, 테트라팩,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으로 한 달 이내에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시민의 불만이 크고, 청년 그룹에서 ‘불모지장’이라는 자체 캠페인을 통해 많은 양을 수거했으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 바 없음. - 도시광산, 플라스틱 방앗간 등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수리와 지속가능한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예-경기도 성남시 Re100 가게) - 마을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플라스틱, 캔, 공병, 잡병, 섬유, 종이)에 대한 유가 보상 -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폐기물 수거 사각지대 분리배출 거점 공간 확보 및 일반분리배출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거체계 - 오프라인 플랫폼인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해 생활협동조합, 지역사회 복지관 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영역에서부터 거점 구축

- 동네 자원순환 거점시설을 총괄하며 업사이클 수리수선, 다화용기 인프라 구축, 중고물품 교환 거래, 동네 재사용 매장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재사용 업사이클센터 지정 및 설치”를 통해 쓰레기 없는 소비(Precycling) 인프라를 구축함.

2. 전주형 자원순환 온라인 플랫폼 ‘온고을 마켓’ 구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시장이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음(당근마켓, 번개 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자원순환 거점 시설과 연계한 공공 배달 앱과 같은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 수선, 재사용 매장 이용 시 지역화폐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도입으로 동기 부여 및 지역사회 확산
-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앱과 연계 운영으로 공감대 및 참여기회 확산

3. 전주형 다화용기 대여 세척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쓰레기 없는 소비(Precycling) 인프라 확보를 위해 주방 및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기관과 연계한 일회용품 다소비 분야에 다화용기 대여 세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확산
- 장례식장, 커피전문점, 배달음식, 야외행사 등에 서비스 제공업체(자활, 뷔페출장 등) 식기 대여 및 회수 세척을 하고 행정은 서비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시 패널티, 다화용기 사용 의무화 등 규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

4. 불모지장·제비장터·플로깅 등 시민 주도 자원순환 캠페인 지원

- 소비자의 쓰레기 없는 즐거운 소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포장재 없는 매장 이용 확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추진 주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추진
- 성상조사 및 쓰레기 투기 원인, 가로 쓰레기 환경 개선 방안까지 참여자의 의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플로깅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지원(일종의 자원순환 플로깅 운영 인증 기관 추진)
 - 플로깅과 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자원순환 플랫폼에 기록 및 포인트 지원(플랫폼은 시가 만들고 포인트 예산은 민간이 확보함)
 - 관에서 일부 추진하는 자원순환 강사 양성 과정을 민간단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론 중심을 넘어 리사이클링센터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답사와 쓰레기 수거 및 성상 조사 캠페인을 기반으로 한 강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내실 있는 학교 환경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및 시민 인식 증진정책제안을 하는 쓰레기 소모임 구성으로 지속적인 활동 전개함.

5. 일회용품 사용량 대비 일정량을 책임지고 회수하는 제도 도입

-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체나 매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량 대비 일정량의 일회용품을 책임지고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함.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차원으로 현재 ‘일회용 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차원임.

6. 고물상의 재탄생, 지역에 맞는 자율적 자원관리(수집, 선별) 모델 개발

- 환경과 복지를 연결한 폐지 수거 노인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들이 지역 폐자원 수집·선별하고,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환경과 복지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얻음.
- 고물상은 일반 주택지역 종이류 재활용품의 80%이상 수집하고 있어 주거지역 골목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음. 동네 고물상도 이러한 지역단위 자율적 자원관리 모델과 결합하여 정비하는 방안 모색 필요함
 - 고물상은 일반주거지역 꼭 필요한 기반사업으로 매일 지자체가 수거하지 못하는 재활용품을 고물상이 수거함으로 저비용 고효율 관리되고 있음.

7. 단독주택 지역 제주형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추진

- 제주시는 올해 36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8곳의 재활용 도움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설되는 센터는 신규 15곳과 북제주 공영주차장 내 3곳이다.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센터 총 53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3곳은 다음 달 초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재활용 도움센터는 클린하우스의 요일별 배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로, 시간과 요일 제약 없이 생활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안내 도우미가 상주하며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해주며,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시로 배출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센터에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캔,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을 합산해 1kg당 10ℓ 종량제 봉투 1매씩 하루 최대 5매를 보상하며 '재활용 데이인' 매주 일요일과 지구의 날(4월 22일), 환경의 날(6월 5일)에는 1kg당 2매씩 최대 6매를 지급한다.

- 시는 향후 도움센터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현장에서 직접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인 감량기 30여 대를 설치할 계획임.(연합뉴스 2022-02-11 '생활폐기물 수시 배출' 제주 재활용 도움센터 18곳 신설)

기대
효과

- 1인당 연간 페트병 소비량 96개 1.4kg / 플라스틱 컵 65개 0.9kg. 비닐봉투 460장 9.2kg 전 국민 PET 71,400톤(49억개), 플라스틱 컵 45,900톤(33억개), 비닐봉투 469,200톤(235억장) 1인당 연간 소비량 11.5kg / 한국인 연간 소비량 586,500톤. 플라스틱 줄이는 시스템구축

근거 출처	▪ 쓰레기를 넘어 순환경제로 가는 길(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자원순환 리빙랩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063-286-7977 / 010-3689-4342)



쓰레기 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



정책	4-2 영농폐기물 수거 시스템 구축 및 농산어촌 자원순환 마을 확대 조성
목표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화 되어가는 농촌 지역의 ‘삶의 양식’ 전환 검토 및 개선안 모색, 주민 참여를 교육과 홍보로 의식개선 및 마을별 특성에 반영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
제안 배경	-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쓰레기의 자원화를 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쓰레기 제로화’ 정책을 추진 중이고 2018년1월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가에 방치되거나 인근 주민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조장하고, 토양과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음. 또한 농업 잔재물과 함께 불법 소각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면서 농촌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주민 건강파해를 주고 있음. - 환경공단에 의하면 폐비닐의 경우 연간 전체발생량의 31%인 약 1만톤이 수거되지 않고 있음. 미수거량이 많은 것은 공동 집하장이 많지 않고 마을 입구나 외곽에 위치해서 논밭에서 집하장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워 현재 배출자의 책임인 이동 운반에 대한 자발적 수거·선별에만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사업 확대 추진 - 민선 6기 전라북도는 공약사업으로 14개 시군에 자원순환 실천마을 15개소 조성. 순창군 자체적으로 10개소 설치함. 시군 자체사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 2018 자원순환실천마을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컨설팅(전주 매암, 군산 무녀, 익산 리암, 완주 종암, 진안 안정, 진안 용정, 고창 향산) 진행 - 재활용 기반시설 구축(페트병, 캔,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처리시설 설치) - 마을리더 육성 및 주민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실천 유도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보관시설 설치 및 수거 시스템 개선 - 임업 부산물을 활용한 화목·목재 펠릿 보일러를 노인정 및 가정에 설치 - 실천마을 상징 홍보물 제작, 생활속 실천요령 홍보(분리수거함 디자인 특화, 마을 간판, 정크 아트 조형물 설치, 달력 제작, 절전형 멀티탭 보급 등) -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 등 컨설팅 - 포대류, 플라스틱용기류 등 고려 농어촌 실정에 맞는 분리배출 항목 및 재설정, 수거노선 및 수거주기 개선 - 수거보상장려금 참여 유도 수준으로 인상

- 취약계층 활용 공공근로 통해 미수거 폐기물 집중 수거
-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확대 및 적정시설로 전환 (펜스, 컨테이너 설치) (전국 19% 불과)
-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소각 금지 주민교육 및 하천 등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관리 및 감시 확대.
- 농산어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자원화와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설치
- 비가림시설, 재활용품 분리벽,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 농산어촌에 맞도록 설치

2.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거시스템 확대 구축

- 영농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한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이행 점검 및 수거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군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분리배출 활성화 및 마을환경 개선 사업 추진.
- 폐농약용기는 그 자체로도 환경오염원이지만 소량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 유실로 인한 하천, 지하수, 토양오염 우려가 있고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되어 농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됨. 따라서 조례에서 폐농약 포장재 수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는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며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 있지만, 농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약해 예산이 적어 보상 비용이 역부족인 상황. 전국 C급 평균 단가 80원 대비 전북 평균단가는 81원으로 적정수준이나 전국 최고 단가 속초시 170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임. 환경비용을 고려할 때 현행 수거보상비 지급액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함.

3. 전라북도와 사군 <자원순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

-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자원순환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수거 시스템 개선 및 자원순환실천마을 추진계획 수립
 - 클린하우스,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 “쓰레기 배출의 날” 운영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 근절로 마을환경 개선
 - 환경교육 지속실시로 마을주민 환경자킴이로 양성
 - 주민 스스로 재활용 및 종량제 쓰레기 등 분리배출 실천
 - 쓰레기 줄이기, 세제 줄이기 등 환경보전 의식 함양
- 생활계 및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를 통해 전년도 이행실적의 평가 및 분석, 자원순환의 통계조사 기초 수립
- 마을별 폐기물 자원순환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재활용률이 높은 마을 공동체의 화합친교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화폐로 감량목표 달성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서 사용
 - 폐어구(어망, 폐부표)를 모아서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여 재활용
 -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병 분리 배출 및 수거로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자원순환 실천 마을 간의 정보교류, 공동 교육 및 선진지 탐방을 기반으로 사군 주민협의

체 및 청년 농민들로 확대된 네트워크 구축

추진 계획	소요예산 (만원)	추진일정					추진주체 (협조기관)
		2022	2023	2024	2025	2026	
1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	2,000	2000					시군/의회 (토론회, 워크숍)
2 시군 자원순환 정책협의회 운영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시군 / 마을만들기지원
3 자원순환정책연구 용역 및 모니터링	6,000	2000	1000	1000	1000	1000	연구기관 (용역)/ 주민참여
4 자원순환 실천 마을조성 20개소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전라북도 / 시군 / 환경부 / 농림부 / 해수부
계	78,000	연평균 15,600만원					

그림 10 고창군 생활폐기물공론화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제안서 참고
- 자원순환 관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 추진

기대 효과	관행처럼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소각하거나 버려온 농업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올바른 처리를 유도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근거 출처	-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서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발표 자료(전라북도의회 토론회) - 한국환경공단 2018 자원순환실천마을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컨설팅 보고서 - 전북지속협 2020 고창군 생활폐기물공론화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제안서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063-286-7977 / 010-3689-4342)



쓰레기 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



정책	4-3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없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목표	팔복동 SRF 소각발전시설 허가 취소 소송의 적극적 대응 및 민선 7기 추진된 노후 산업 환경오염조사연구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
제안 배경	전북 전주 미세먼지 농도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음. 2021년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익산과 전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이 많은 지역으로 꼽힘 -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북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μg/m³, 2019년는 26μg/m³, 2020년 20μg/m³, 2021년 19μg/m³으로, 기준점인 15μg/m³보다 월등히 높았음. - PM2.5 전국 평균농도는 2018년 23μg/m³, 2019년 23μg/m³, 2020년 19μg/m³, 2021년 18μg/m³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 40%로 1위 -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크기와 성분이 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 -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화학적 성분과 독성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는 정책 필수적. 전주시 SRF 사용시설 용량은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다 수준임. - 전국 쓰레기 고형연료제품(SRF) 사용량은 4,312,605톤으로 전북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약 94만톤(22%)을 사용함. 그중에서도 전주파워(소각량 1,483톤/일, 우드칩, bio-SRF)와 전주원파워(1,361톤/일, 폐수오니, 톱밥)가 소재한 전주의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음. - 하루 280여톤의 SRF를 소각발전하는 주원전주는 전주법원으로부터 1km, 양현초등학교 양현중학교까지 900m, 만성법조타운 골드클래스로부터 600m, 만성지구로부터는 270m 떨어진 곳에 위치함. 바람의 방향에 따라 팔복동, 서신동, 하가지구 나아가 분지 지형의 전주시 전체에 영향. 전주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 및 시설 난립으로 인근 생활환경 악화. - 만성지구 등 주거밀집지역 형성으로 기존 팔복동 공업지역의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제조시설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높음. 전북은 생물성연식농업부산물 추정)에 의한 배출(29%)이 차지. 전국 평균 1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배출량 차지 -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사업장 및 도

	로 등의 비산먼지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업부산물 연소에 의한 배출(29%)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배출량이다. • 새만금 내부 개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가 초미세먼지 기원 - 전주와 익산시의 미세먼지 화학 성분을 보면 유기탄소 농도의 비중이 높음. 유기탄소는 생물성 연소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갯벌에 쌓인 유기물의 퇴적물 중 매우 세립자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펄 입자 중 초미세먼지는 내륙 깊숙이 이동하는 연구 결과로 볼 때 내부개발 공사로 인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함. • 보릿대 등 농업 부산물과 영농계 폐기물 불법 소각시 미세먼지 발생 증가 - 작물 추수가 끝나는 11월, 농사가 시작되는 3월, 보리 수확기 직후인 6월에 농업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 보다 급격히 증가 - 전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상 농업과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음.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 이전 및 휴폐업 보상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이하 고형연료 특별법) • 전주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개선방안 연구회 운영 용역을 통해 ‘고형연료 특별법’ 제정의 근거와 초안이 마련되었음.(붙임 1) -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SRF시설이 들어서면서 행정 기관, 주민, 사업자와의 각종 소송이 벌어지고 있음. SRF시설이 있는 부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전 비용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담은 ‘고형연료 특별법’ 이 요구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해소와 사업자의 사업비 손실 보상을 통해 이전 휴폐업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함. - 현재 주원전주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취소 (발전시설 관련 - 생태도시계획과)” “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2개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연관 소송이 3건, 기 병합이나 마무리된 소송까지 포함하면 10건에 가까운 소송으로 행정력과 예산 부담이 큼. • 전주시 팔복동 소재 소각업체인 주원전주는 연간폐기물처리량이 19,800톤(60톤/일)으로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0,271kg이고, 이를 톤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1.53kg/톤 임. 여기에 성상의 차이가 없는 쓰레기 고형연료(SRF, 215ton/일) 소각 발전시설을 추가하려 함. 연간 78,475톤으로(30% 추가 사용 없이 전일 가동 기준) 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120,066톤의 가스상 물질이 발생함. - 주원전주 개요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78-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발전용량 : 9,900KW(환경영향평가 기준 100KW 미만) /연간전력생산량 : 71,280Mwh / 고형연료 사용(SRF, 215ton/일) / 기존 일반폐기물 소각용량 : 60ton/일 → 신설 소각용량 : 64.8ton/일 / 하루 280톤 최대 1.3배 추가 가능

2. SRF 제조사용시설 입지 제한 및 품질관리와 사용시설 관리 강화

- 전주시 사례 -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환경오염 시설 신규입지 제한)으로 소각시설 입지 규제 - 와 같이 계획·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제도화.
 - 전주시는 팔복동 산단 일원을 기존 전통적 제조업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응 가능한 신산업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형 산업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업종을 관리하고, 계획·적·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태평지구, 추천대지구)
 - 공장 중 특정유해물질, 대기1~3종, 폐수1~4종 배출공장, 공해업종 제한
- 원료 반입 시 품질 검사 및 선별 강화, 부정원료 반입 업체 패널티부여, 비닐 등 합성수지 SRF의 비성형 제품 금지, 시설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TMS)설치 의무화, BIO-SRF 제조 사용시 MDF 등 성분 검사. 침출수, 비산먼지 등 방지를 위해 원료와 제품 모두 실내보관 생산 및 사용시설 관리 강화.
 -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제외) 관리감독 강화
 - 해당 위반 사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확히(규정 확인) 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초과 시설 행정처분 강화,
 - 사용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의무화 횟수 확대(연 1 회→ 연 4회), 자가 측정결과 관리 강화와 객관성을 확보한 측정 기관으로 측정 유도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주체가 도와 시, 환경청으로 나뉘어 있고, 지자체의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부족함. 전주시는 산단대기팀을 현장 사무실로 운영하고 팀원도 확대하고, 산단 오염배출시설 개선 및 현장 감시활동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체계적인 산단 감시 시스템 및 관리대책이 과제로 남아 있음.
 - 2018년 말 기준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담당자 수는 총 387명으로 1인당 평균 146.2개 의 사업장을 담당.
 - 환경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단 검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산단 대기 안전 감시센터 전망을 갖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그로 인해 대기 사업장 배출시설 지도점검 위반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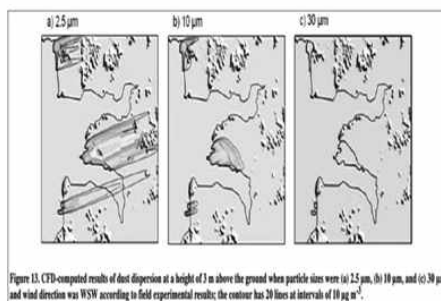
4. 소각시설 CCTV 설치 및 드론 감시장비 실효성을 높여 시민 감시 확대

- 소각시설은 24시간 가동으로 특히 야간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소각장 덤프트럭, 계근대, 보관창고, 투입구, 소방센서, 굴뚝 등 관리가 필요한 모든 설비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관리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시범 가동중인 드론 감시 장치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함.

5. 경작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저감 대책 및 수거시스템 구축

- 도내 보리, 밀,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156,708호로 전국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농 부산물의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병충해 방지 등의 관행상 이유로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
 - 영농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한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이행 점검 및 수거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
 - 농민들은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고,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6. 새만금 갯벌 노출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 호내 준설토로 매립하는 농생명용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인근 군산 지역은 물론 만경강을 따라 익산시, 전주시 등 내륙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됨. 도는 단순 날림 먼지라고 하나 유기탄소 비중이 높은 미세먼지의 화학 조성 등을 볼 때 새만금 노출지에서 기원한 미세먼지로 판단됨.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지구 내 사업장별 저감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농촌공사 자료에 의하면 직경이 2.5μm(PM2.5)인 입자는 거리가 멀어져도 농도가 거의 불변인 상태, 즉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 됨

기대 효과	▪ 대기오염을 줄여 각종 환경성 질환 예방으로 시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비용의 감소,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SRF 생산 및 사용시설 규제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노출을 최대한 줄여감.
근거 출처	▪ (2021년)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실적현황 - 한국환경공단 ▪ 전주시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 전북녹색기술지원센터 ▪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개선방안 연구회 운영 용역 보고서 - 전북녹색기술지원센터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063-286-7977 / 010-3689-4342)



쓰레기 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

정책	4-4 사업장 쓰레기 매립 소각 발전 처리시설 공공성 확대 제도화
목표	쓰레기 처리시설의 환경 안전 관리 및 지도 감독 강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주민 수용성 절차 확대 등 쓰레기 처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 배경	-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은 11.7% 수준이다(2019년 기준). 나머지는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0.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3.1% 순임. -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88% 담당하고 있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해물질배출 저감, 시설 안정성 보장, 주변 영향조사 등 감시와 관리가 공공 시설에 미치지 못하면서 산업(지정)쓰레기 소각과 매립시설 설치의 지역적 갈등 현안이 되고 있음. - 산업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과 매립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이 돈만 보고 부적절한 입지에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팔복동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남원 대강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정읍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행정 소송 중이며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음. 또한, 익산시 낭산면과 완주 비봉면 지정폐기물 불법투기, 방치된 쓰레기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환경 주권' 차원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장 쓰레기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도 폐촉법과 공공폐자원시설 특별법 등에 준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특정 지역 차별과 피해 누적을 예방하기 위해 입지에 따른 소각로 연한 제한과 용량 제한을 도입해야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및 시민 환경권리센터 설치로 갈등 조정 -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자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2~3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함. - 불법행위 점검 및 지도 관리 인원 증원, 환경특별사법경찰 권한 강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 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불법 투기 된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지원하고 입지 관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갈등 예방과 부서 간 업무 협의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호해야 함.

2. 신규 매립장의 설치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로 제한하는 정책 추진

-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설치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만 신규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함.
 - 기존 매립장은 민간업체가 그대로 하는 것이므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 매립장의 경우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특별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임.
-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가 의무화된 산업단지의 경우에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가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하되, 매립장 영업구역을 전국이 아니라 해당 권역으로 제한 함
 - 산업단지 내 매립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타지역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임.

3. 민간업체들이 얻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로 주변 지역주민 지원 법률 제정 추진

-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일부 산업폐기물매립장 업체가 지나친 초과이익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산업폐기물 매립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이를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생활계 폐기물처리시설에 준하는 지역사회를 지원 방안 마련할 수 있음.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또 하나의 오염원이므로, 이러한 정책은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 매립세도 참고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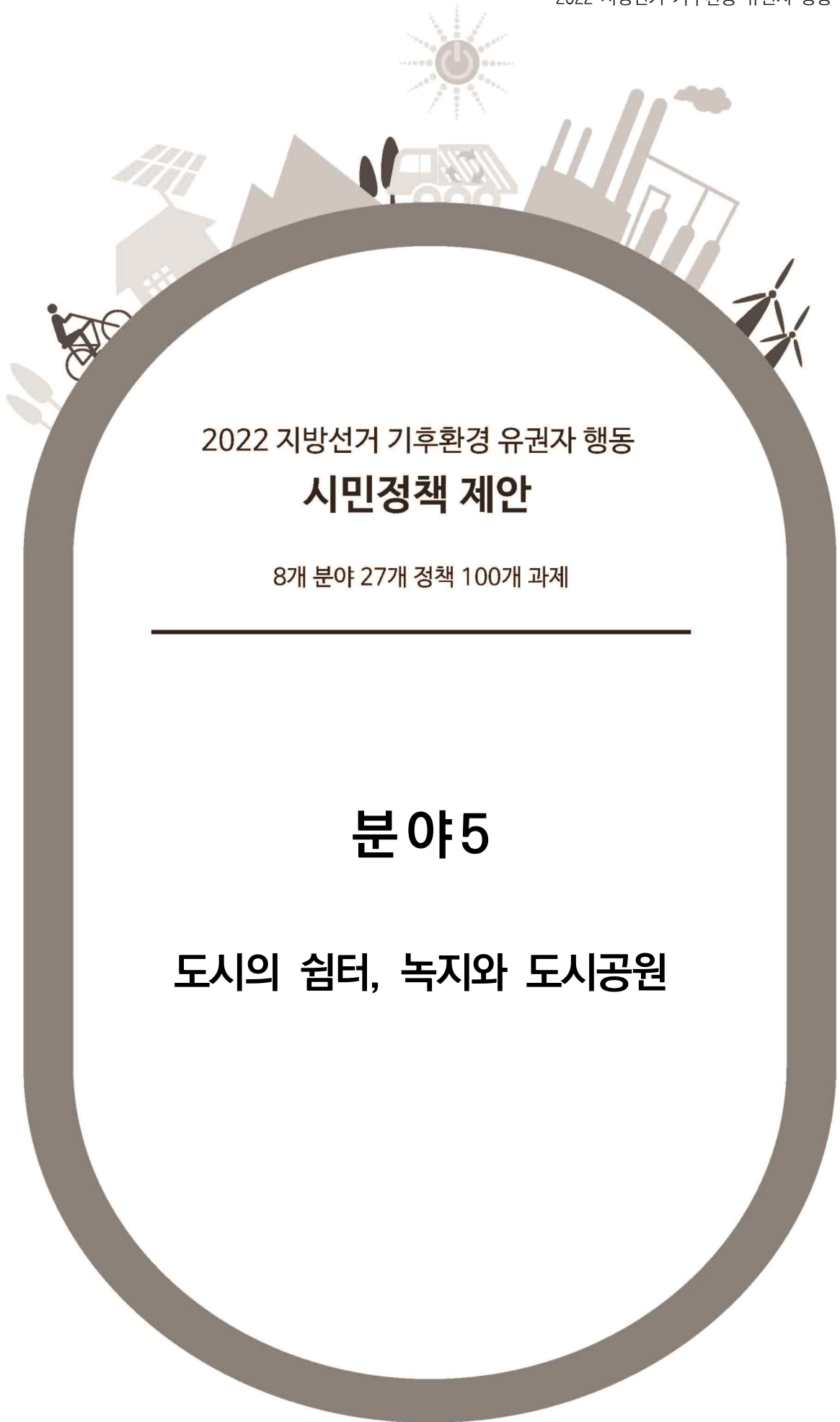
4. 생활폐기물매립장 수준으로 주민참여·감시를 가능하게 하도록 법률 제정 추진

- 생활폐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참여·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유해성이 더 높은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음.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폐촉법 지원 확대」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 2020년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폐기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기대
효과

- 시대적 흐름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운영 관련 지역갈등과 환경문제 개선
- 21년 시행된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기준강

	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한 공정성과 수용성 확대.
근거 출처	▪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 대선 정책 제안 자료 ▪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시설 문제의 현황과 대안 토론회 ▪ 전북환경운동연합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의견서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063-286-7977 / 010-3689-434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5

도시의 쉼터, 녹지와 도시공원



도시의 심포 녹지와 도시공원



정책	5-1. 전주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목표	- 도시공원 보전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 저감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공원 축소 방지
제안 배경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2개소의 총 면적은 14,536.7 천㎡이며 이 중 사유지는 9,451.5 천㎡으로 약 57.1%가 사유지임(2019년 2월 기준).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2020.7)에 맞춰 전주시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천명하였고, 이후 사유지 매입에 나섬. - 현재까지 매입한 사유지는 약 290 천㎡로 전체 사유지의 3% 수준이고, 개발이 우려되어 전주시가 우선매입하기로 한 개발가능지(약 202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약 9.7%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준으로 보면 2% 수준에 불과함. - 이는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서울시가 약 91.5%를 매입(2021.9 기준)한 것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임. 2025년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도시공원은 크게 줄어든 우려가 있음. 이러다가는 도시공원이 지금의 1/5 정도로 줄어든 우려가 높는데, 현재 전주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5제곱미터이지만 1/5로 줄면 5제곱미터로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6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짐. - 전주시의 공원 매입이 저조한 이유는 전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함에 있어 법에 정한 수용 등 강력한 행정력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을 원하는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임.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우선보상 대상지를 시작으로 강력한 매수 정책 시행 - 서울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곳, 소송 패소지 등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2020년까지 전부 확보한 후 공원간 연결토지, 정형화필요토지, 잔여 사유지의 순서로 지속적인 매수 정책을 진행 중임. - 도시공원일몰제에 맞춰 전주시 역시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집행이 미진하였고, 토지소유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다시 용역을 진행중에 있음. 용역이 완료되어 우선 매입지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강력한 토지 매수가 실시되어야 함.



<그림. 서울시의 단계별 토지 매입 계획>

2. 도시공원 매입 예산 적극적으로 책정

- 전주시는 전주시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9.44km²에 대해 6단계로 매입 순위를 매겨 오는 2025년까지 개발가능지 2.02km²를 우선매입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7.42km²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힘. 당초 매입비가 14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출처 : 2022.1.20.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계획 브리핑을 보도한 뉴스핌 기사 내용)
- 중앙정부가 도시공원매입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를 7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 및 예산 배정이 필요함.

3. 부지활용 계약 및 재산세 감면 등으로 소유주들의 참여 촉구

- 서울시는 '공원 유지에 공감하며, 소유권 유지 원하는 곳으로 시민 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주들과 부지사용계약을 맺어 도시공원의 실효를 유예하고, 공원 매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함.
- 13개공원(70,229m², 61필지)에서 학교, 종중, 종교단체, 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6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함(21.10월 기준).
- 부지활용계약 체결한 토지소유주들에게는 재산세를 100% 감면함. 도시자연공원구역

	에 속한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
기대 효과	도시공원 규모 축소 방지하고, 공원 보전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보전함.
근거 출처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2019. 2) -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과제(2021.10)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063-286-7977 / 010-5191-2959)



도시의 심포 녹지와 도시공원

정책	5- 2. LH의 가련산 아파트 건설 계획 중단
목표	전주천과 덕진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축인 가련산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가련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
제안 배경	- 가련산공원은 2018년 12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됨. -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련산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LH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상태임. - 원대한방병원 인근 재개발로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련산공원 아파트 개발사업까지 추진될 경우 교통난이 가중될 것임 - 가련산 공급세대 총 1503세대 중 공공임대주택은 300세대 규모로 20% 수준에 그치며 이 또한 민간임대는 5년 후 분양, 공공임대는 8년 후 분양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어 공공임대의 허울을 쓴 아파트개발 사업일 뿐임.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국토부와 협의해 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 국토부와 LH는 지방의 주택문제 해결에 있어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함. 공급 중심의 주택문제 해결책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만 부추길 뿐 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함. - 수익성이 좋은 공원이나 시 외곽지역의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 아파트 중심보다는 새로운 주택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기개발된 도심권의 재개발 요구를 반영한 공영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주택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2. 자치단체 권한 활용해 가련산 아파트 건설 최대한 축소 2009년 국토부는 공원 일몰제 관련 대비책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고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는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포장되어 왔으나 기부채납 하는 70%의 공원부지들은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

	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임. ▪ 현재 30%까지 고밀도 개발을 용인하고 있으나 이는 상한선이라 꼭 30%까지 개발할 이유가 없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파트개발면적을 10%로 한정하고 있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면 아파트 건설을 최소화하고, 아파트 건설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야 함.
기대 효과	▪ 도시공원 보전, 교통난 예방, 도시재생 측면의 공공 주택 정책 마련
근거 출처	▪ 도시공원지킴이전주행동(준) 보도자료(2022.2) - 국토부는 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LH 가련산공원 개발계획을 중단하라!
문의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소영 사무국장(☎063-281-2959)



도시의 심포 녹지와 도시공원



정책	5-3. 이해충돌 배제하는 제도 도입 및 도시공원시민협의체 구성
목표	- 공원 토지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마련 - 도시공원 보전을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하는 교육, 홍보, 정책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 전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전체 도시공원 매입을 결정한 이후 이에 반발하는 토지소유주들의 집단 행동(집회, 산책로 통행 방해 등)이 일어났고, 토지소유주들은 전주시에 요구하여 토지소유주들과 전주시가 참여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협의회를 구성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기구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큼. - 서울시의 경우 토지보상심의회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보상 우선 순위를 조례로 미리 정하여 매수 토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하고 있음. - 도시공원일몰제는 5년간 유예된 것(국공유지는 10년)에 불과하고, 도시공원 매입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도시공원시민협의체를 운영할 필요 있음.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토지 매수 우선 순위 법제화 및 도시공원 보상심의회 구성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용역에서 토지 매수 우선 순위를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것이 조례화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하여 토지매수 우선 순위를 조례에 담아야 토지 매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행정 소송에 대비할 수 있고 행정이나 보상심의회 위원의 개별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인 판단하에 토지 매수가 결정됨. - 도시공원 보상심의회는 이해충돌이 있는 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도시공원시민협의체 구성 - 서울시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도시공원 실효 관련 중앙정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방안 모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의 상생에 관한 사항 모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함.

	▪ 서울시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약체(1기)는 도시공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였으며 2020. 6 까지 운영하였음. 2021. 10 현재 도시공원시민협약체라는 이름으로 2기 협약체를 운영하고 있음. ▪ 전주시의 경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전까지는 시민환경단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이후로는 협약체가 구성되지 않았음. 공공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 시민협약체 구성이 필요함(토지소유주들이 제안하여 만든 현재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협의회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 공공거버넌스기구로 부적합함)
기대 효과	▪ 공정한 토지 보상. ▪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공원 보전
근거 출처	▪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과제(2021.10)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063-286-7977)



도시의 심포 녹지와 도시공원



정책	5-4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목적	도시숲을 통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전과 이용에 대한 총량적 개념 요구
제안 배경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물 서식지 감소, 녹지 파편화, 생활권 녹지 공간의 축소,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도시숲은 도시 자연경관보호, 도시열섬완화, 소음저감, 공기정화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도시숲의 신규 조성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유지와 관리에 대한 정책과 투자는 부족하며 지자체 도시숲 조성 예산에 비해 관리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도시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면적을 녹지 총량으로 관리하는 도시숲총량제도 도입 -도시의 면적, 거주 인구 등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양적, 질적 총량을 산정한 뒤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유지해가도록 하는 것. -도시숲의 훼손이 불가할 경우 해당 도시 내 대체 도시숲을 조성해 숲의 총량 유지해야 함 2. 시·군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관리계획 포함 -도시숲 보전 총량 설정, 총량 유지 방안 마련
기대 효과	시민들이 휴식하고, 도시 기후를 조절 하는 등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권 도시숲 면적 확대
근거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분석과 복원, 관리방안, 2020
문의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 유지은 063-231-4455/010-6797-4572 이메일 /forestjb@hanmail.net



도시의 심포 녹지와 도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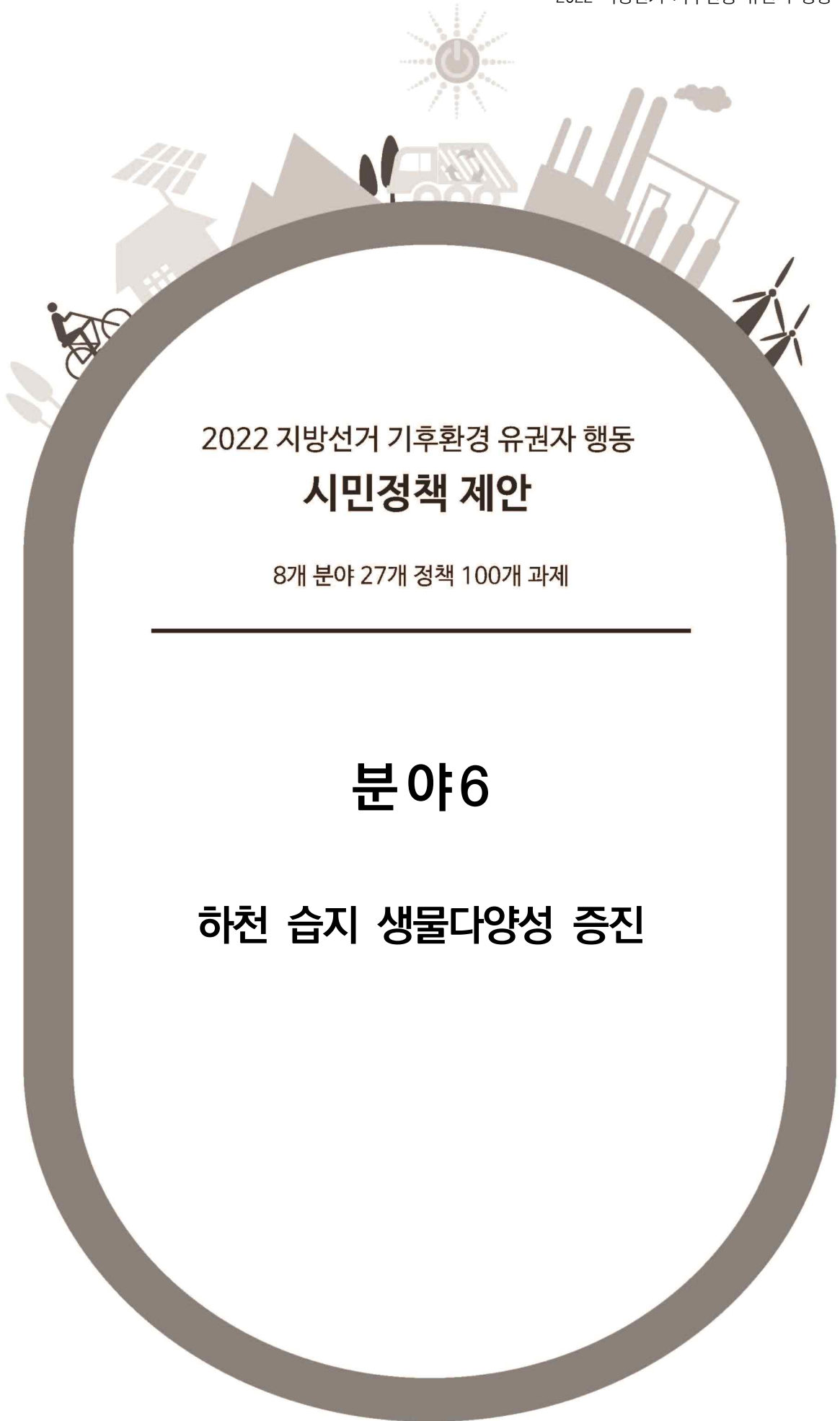
정책	5-5 가로녹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호수·노거수의 관리 강화
목표	전주의 가로변이 다층 식재로 바뀌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며, 전주의 역사를 가진 보호수·노거수의 관리를 강화함.
제안 배경	- 도심의 가로변이 바람길 숲 등의 국비 매칭 사업을 통해 단층 식재에서 다층 식재로 변하고 있음. - 기존의 가로변은 관목 위주의 단층 식재로 단조로움. 다층 식재로 바뀌면서 가로변이 아름다워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주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와 노거수의 관리를 강화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가로녹지 관리시스템 구축 - 전주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바람길 숲 조성,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가로변을 식재를 다층화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변화된 다층식재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 필요 2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 강화 - 전주의 역사를 가진 보호수와 노거수의 관리를 강화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무들을 지켜나감. - 스탬프 관광 등 전주의 관광자원으로 연결 가능
기대 효과	- 가로녹지의 체계적 관리 - 보호수와 노거수의 관리 강화를 통해 스토리로 만들고, 스탬프 관광 등 전주시가 관광 거점도시를 추진함에 일조할 수 있음
근거 출처	-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21. 3. 18) -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전주시 노거수 현황조사보고서(2015) 2019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2019. 6) - 나무할머니의 옛날이야기(2012. 11)
문의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박성례 (☎ 063-285-0515 / 010-2646-8121)



도시의 심포 녹지와 도시공원

정책	5-6 정원도시 사업의 지속 및 유지관리 활동 지원, 그린 일자리 확대
목표	전주시민이 걸어서 5분 안에 접할 수 있는 생활권공원에 포인트 정원을 확대 조성하여 공원은 우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전주시민의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질을 높이며, 일자리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전주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고취함.
제안 배경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의 열섬화를 제어하기 위해 전주시의 생활권 안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이름으로 249개의 공원이 있음.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화 저감을 위해 스트로브잣나무 등의 교목들이 우거져 공원이 어둡다는 인상을 주며, 우범화된 곳들이 있어 공원을 밝히기 위해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함. 이러한 생활권공원에 포인트 공간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을 밝게 하여 전주시가 정원도시로서의 면모를 느끼게 할 수 있고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전주시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도는 이미 높아져 있음. 조성 및 유지관리 활동은 ‘정원친구들(전주시 시민정원사 수료생 중 정원관련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이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신중년·노인일자리와 연계한 그린 일자리 확대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생활권공원에 포인트 정원 확대 조성 전주시는 ‘도시가 정원이 된다’는 기치 아래 지방정원조성, 정원산업클러스터 조성, 탄소산단숲 조성, 바람길숲 조성, 도시숲 조성 등 국비매칭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시민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생활권공원에 포인트 정원 확대 조성 2. 정원친구들 활동지원 생활권공원에 포인트 정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시민정원사인 초록정원사 수료생 중 자원봉사자 ‘정원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그린 일자리 확대 신중년·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그린 일자리를 확대함

	정원해설사 양성을 통해 관광거점 도시사업과 연계 4. 한옥마을에 전통정원 조성 전주하면 전통을 떠올리므로 한옥마을 인근에 전통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거점 도시사업과 연계
기대 효과	정원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함 정원친구들 활동지원을 통한 체계적 정원 유지관리 신중년·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그린 일자리 확대 한옥마을 정원해설을 통한 한옥마을 관광활성화 및 정원투어를 통한 관광객 유치
근거 출처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21. 3. 18) 천만그루정원도시 전주 종합계획 보고서(2020. 6) 천만그루정원도시 전주 종합계획 전주 한옥마을정원조성 기본계획(2020. 6) 전주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2019. 12) 한옥마을 정원해설프로그램 보고서(2021. 12) 전주정원 발굴 및 등록·지원에 관한 연구(2021. 7) 2022 정원친구들 130명 활동 중, 노인 일자리 120명 활동 중, 초록정원사 220명 배출('22 수료예정자 40명 포함). 2022 정원해설사 12명 활동 중
문의	-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박성례 (☎ 063-285-0515 / 010-2646-8121)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6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6-1. 전주천 국가하천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수생태계 개선
목표	-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하천생태계가 열악한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수질 및 생태계 복원, 이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풍부한 수량, 넓은 하천, 모래톱과 하중도, 수변생태 공원 조성을 통해 전주천이 천 년고도 전주의 상징이 되고, 큰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물의 도시로 이미지 제고.
제안 배경	- 국가하천 전주천의 상류인 전주천과 삼천은 시와 환경단체가 협치하면서 수달, 쉬리가 서식할 정도로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도가 높은 반면, 전주천 하류(삼천 합류 금학보~만경강 합류부) 구간의 수질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쁘고 악취가 심함. - 전주천 중상류 구간에는 어류가 20여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국가하천구간인 신평보 상류에는 오염에 강한 9종만 서식하고 있으며, 수서곤충은 1종도 살지 못하고 있음. (2021년 전주시 생태하천협의회 조사 결과) - 인근 공단지역의 합류식 하수처리시설로 인해 폐수의 하천 유입이 잦고 및 우기 시 무단방류, 전주천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인해 유수량이 줄고 정체수역이 늘어남. - 금학보부터, 신평보, 신평계보, 이정보, 화전보에 쌓인 퇴적물이 부패하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악화가 반복되고 있으며, Fe(철)과 Al(알루미늄) 등 하천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2017년 전주천 수달 서식지 조사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전주천, 삼천에서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수달 서식지 연결 및 확대가 필요함. - 전주천 하류 구간은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나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세울 수가 없음. 하천 유지관리 위임사무를 제외한 오염하천 정화 사업이나 생태복원은 환경부가, 하천정비 사업은 국토부가 나눠서 관할하고 있었다가 최근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가 국가하천 관리를 맡게 됨.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전주시는 익산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2021년까지(당초) 국비 등 총 220억원을 들여 노후 공단지역이자 침수지역인 팔복동 철길 옆 금학천을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수생태 환경으로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익산국토관리청은 5개 보를 여울형 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 높이를 낮

	취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평보는 사업에서 제외함. 전주시, 농어촌공사, 농민회, 환경단체 4자간 협의체는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신평보 높이를 낮추는 것에 동의하고 전북연구원에서는 신평보를 70cm 낮춰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모델링결과만으로 보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전주시와 환경단체는 실증실험을 제안함. 한편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보 수문을 열어 퇴적물을 배출하여 수질 개선을 하자는 데는 4자 모두 동의하였으나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못함.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좌우안을 시민들이 건널 수 있는 이동로가 한 곳도 없어서 전주천을 향유하기 매우 곤란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신평보 개선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전주천 - 하천 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한 전주천 하류 구간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신평보를 개선하고, 모든 보가 겨울철에는 수문을 개방하여 퇴적물을 내려보내고, 지천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전주천의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달성. 2. 생태문화공원화로 문화와 자연생태를 담는 전주천 - 전주천 하가지구 수변공원, 삼천 서곡구간 생태습지공원, 전주천 수달 서식지, 추천대, 금학천 정비, 팔복동 산단재생과 철길명소화사업, 팔복예술공장 등과 연계하는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생태문화공원화 사업 추진 3. 이동로와 생태 축 연결로 사람이 모이고 생태를 잇는 전주천 - 전주천 좌우를 잇는 이동로 설치, 전주천과 만경강의 생태네트워크 연결, 전주천 자연하천 복원사업 100% 마무리, 전주 완주권 하천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 발전 기대. 팔복동 송천동 일대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효과	깨끗한 전주천을 만들어 농민들이 깨끗한 물로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시민들은 악취 없는 전주천과 그 일대의 생태문화자원을 향유하며, 야생동물에게는 다양한 서식공간을 제공하여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전주 북서부권 지역을 조성함.
근거 출처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 자료집(21.11.19)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063-286-7977 / 010-5191-2959)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최현규 사무국장(☎063-284-2974)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6-2.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목표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경관이 우수한 만경강 중상류(신천습지·전주완주)지역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전략에 기반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더해 환경 일자리와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감.
제안 배경	-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확보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각종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10개 법률 21개 보호지역(세부유형 포함)으로 육상(12.6%) 해양(1.41%)이 차지함. - 도내 습지보호지역은 ‘고창 운곡습지(2011.3.), 정읍 월영습지(2014.7.),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2018.10)가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하도습지(강, 하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 - 만경강 중·상류 구간(고산 - 봉동 - 소양천 합류 신천습지 - 하리교 - 전주천 - 익산천 합류까지)은 100년 이상 된 보와 홍수기에 쌓인 자갈과 모래들이 크고 작은 하중도(河中島)를 만들면서 하천 식생과 호소(湖沼) 식생이 혼재해 있음.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제공하며, 조류의 번식지 및 월동지,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서식환경이 조성됨. 108종, 8만 본의 나무가 심어진 52km 제방 숲은 대한민국 최고의 푸른 길(Green Way)이며 작은 생물의 서식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숲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나 전주 전미동 구간 좌안 2km 구간은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아 연속성과 기능 측면에서 제방 숲 조성이 필요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만경강 중상류(신천습지 일원)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 만경강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곳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수달, 매, 황새), II 급(살, 금개구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이 서식하고, 멸종위기식물인 가시연꽃, 감소 추세종인 통발과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으로 등급이 높은 긴흑삼릉, 자라풀, 수염마름, 왜개연꽃, 흑삼릉, 질경이택사, 개쇠뜨기 등이 분포하는 하도습지임. - 환경부는 만경강 동진강 일대의 하도습지 26곳 중 유일하게 신천습지를 습지보전

등급 상(上)으로 분류했음.

- 하도 습지의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행위 제한이 없고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주민 주도형 관리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생태관광, 체험마을 등 생태계 서비스 제고를 통한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주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 됨.
- 전라북도는 그린뉴딜 관련 사업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일원에 습지와 탐방로 등을 조성할 생태문화 복원사업에 1,500억 원을 요청함. 물관리일원화로 2022년부터 하천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끌어내는 데도 유리한 조건임.
- 전라북도가 환경단체의 제안과 전북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조사를 토대로 전주시와 완주군에 ‘신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만경강 살리기 운동과 연계해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군의 역할이 중요함.
- 환경단체는 2008년부터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으며 여러 차례 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자연생태와 생물다양성,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종)을 명확히 설정한 후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함.



그림.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추진 2차 워크샵(2021.12.17.) 발표 자료

2. 만경강 특별보전 및 일반보존지구 지정 확대 제안 _ 환경부 협의

- 익산국토관리청은 만경강 하천공간 지구를 102개 구간(좌안 49개 지점, 우안 52개 지점) 4개 용도로 나누고 이중 보전지구를 31개 지구로 관리하고 있음. 보전지구는 특별보전(현 2개소-신천습지 좌안과 우안)과 일반보전(29개소)으로 지정되어 있음.
- 신천습지를 기점으로 상류 구간(고산-봉동-소양천)과 하류 구간(하리교 -전주천 합류지점-익산천 합류) 또한 생태경관과 생물종다양성도 신천습지에 비해 뒤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보존지구를 확대 조정해야 함.
 -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황새를 비롯해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자연성이 뛰어난 익산천 합류부 구간(도면 N0.6)을 특별보전지구로 변경 지정해야 함.
 - 익산국토관리청이 5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 변에 조성한 친수 이용시설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공원시설 등) 및 친수 거점 지구는 확대하지 않음.

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으로 만경강 생물 다양성 증진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임.
 -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남.
 - * (예시, 습지조성) 법정보호종 출현 및 수량 유지가 용이한 곳 위주로 주변에 적합한 식생복원, 자연적 수원확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여 육화 방지
- 만경강 좌안 전주시 구간은(약 12km) 너른 농경지가 겨울 철새들의 서식지기능을 하고 있으나 최근 헬기장 조성 등으로 서식여건이 나빠진 상황을 고려해 무논 조성, 벼짚 존치 등 주민참여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를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확대해야 함

4. 완주군·전주시 만경강 수변 낚시 등 금지행위 구간 확대

- 완주군과 전주시는 만경강 장자보 ~ 화전보 9.4km 구간과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일부에서 낚시 및 취사 행위를 제한함.
 - 과태료 : 「하천법」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구간이 황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익산천 합류구간(전주시 덕진구 강흥동)까지 확대해야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및 자연 환경 보호 효과가 커질 것임. 5. 통합물관리 정책에 기반한 만경강·전주천 유역센터 시범 운영 ■ 도시형 민관협력 하천관리의 모범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금강유역종합계획의 주민 참여 유역물관리 정책의 핵심인 중권역(만경·동진강) 유역센터의 전망을 갖는 시범 운영 지원
기대 효과	■ 만경강의 생물다양성과 하천 경관이 유지되고 황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안정화되면 풍부한 수량, 넓은 하폭, 모래톱과 하중도, 수변 생태 공원이 어우러져 천년고도이자 역사문화 도시인 전주의 상징이 될 것임.
근거 출처	■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생태하천협의회 토론회 발표 자료 - 황새와 공존하는 만경강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정책토론회(21.3.16) -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추진 워크숍(2021.12.17.)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063-286-7977 / 010-3689-4342)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6-3 에코시티 백석저수지,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세대의 생태공원 조성
목표	고밀도 도시개발사업으로 녹지 공간이 부족한 에코시티 백석제의 수변 녹지의 기능, 생물다양성과 경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백석제 수변 공원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고 공원부지만이 아닌 백석저수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안 배경	- 전주 백석저수지는 전주 35사단 이전 부지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군부대와 저수지, 녹지와 농경지가 있던 곳에 아파트 숲이 뻗뻗하게 들어서고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녹지가 사라진 곳에 남아 있는 생태계의 보석과 같은 공간임. -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백석저수지 수변공원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큰기러기와 큰고니(천연기념물)의 서식이 확인됨. -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삶과 황조롱이, 큰기러기가 사후환경조사에서 추가 발견. - 전주시가 최근 작성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보면 도시공간 속에 남겨진 생태 서식처라는 위치적 중대성과 토지 모자이크 배열 측면에서 만경강과 도심을 잇는 경관생태학적 가치가 최상위로 평가됨. - 전주시는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에서 수립된 공원 조성계획을 환경적인 요소를 확대한 계획으로 바꾸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변경 취지와 달리 이용 위주의 공원시설 비중이 더 높아졌음. - 수변 데크 길이 70m에서 366m로 늘었고, 주차면 수도 16대에서 111대로 증가함. 또한 수변 조망 테라스(1,300㎡), 잔디광장(6,100㎡) 등 인위적인 시설의 비중이 높아졌음. 자연과 공존하는 전주시민 모두의 공간이라 보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정원이 될 가능성이 큼.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전주 백석제 생태 공원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전주시는 환경단체의 제안을 수용하여, 민관협의체 구성 절차를 밟고 있음. 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민선 8기 시정에서도 민관협의체를 통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공원 부지를 넘어 백석저수지 전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미확인된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기능 및 생태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전주 도시생태 현황지도와 정합성을 분석한 후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함. 또한, 주민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와 조성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세대의 숲과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함.

2.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세대의 숲과 생태공원 조성

- 주차장 면적과 주차면 수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당초 계획에서 16대이던 주차 면수가 111대로 무려 7배가 늘었음. 웬만한 1급 공영주차장보다 큰 주차장을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의 공원에 걸맞게 대폭 줄여서 완충 녹지조성이나 공원 내 필요한 시설 이동 배치, 생태적 기능과 결합한 가로 정원 조성을 검토해야 함.
-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백석제 수변의 특성과 관리를 고려할 때 단순 식생인 잔디 식재나 야외무대 설치의 부적절 함. 도시공원 잔디밭의 이용행태 분석 결과를 봐도 녹지 공간 내 잔디밭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평가가 많음. 잔디광장(6,100㎡)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 주차장 부지로 이동해야 함.
- 큰기러기와 큰고니의 서식 및 이용 환경을 위협하는 과도한 366m 수변 데크 길과 조망 테라스(1,300㎡) 대신 백석저수지 둘레길 등의 대체 시설을 검토
 - 데크 길과 조망 테라스가 설치되는 수변 구간은 멸종위기종 큰기러기 대거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사후 환경조사서에 500여 마리로 보고 되었음.
- 공원 부지 휴경지 등에 주변 식생과 어울리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나무를 심거나 다층 림을 조성해야 함.



현재 용역 중인 에코시티 공원조성 계획도

기대 효과	▪ 자연에 가까운 숲으로 복원해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변 환경도 개선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반영해서 전주를 대표하는 미래세대의 생태경관 공간으로 조성
근거 출처	▪ 『전주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공원계획조성 용역 중간 보고자료 ▪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인공시설 최소화, 다층림 조성, 자연성 회복으로 공원계획 변경하라! (22. 3.16)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063-286-7977 / 010-3689-4342)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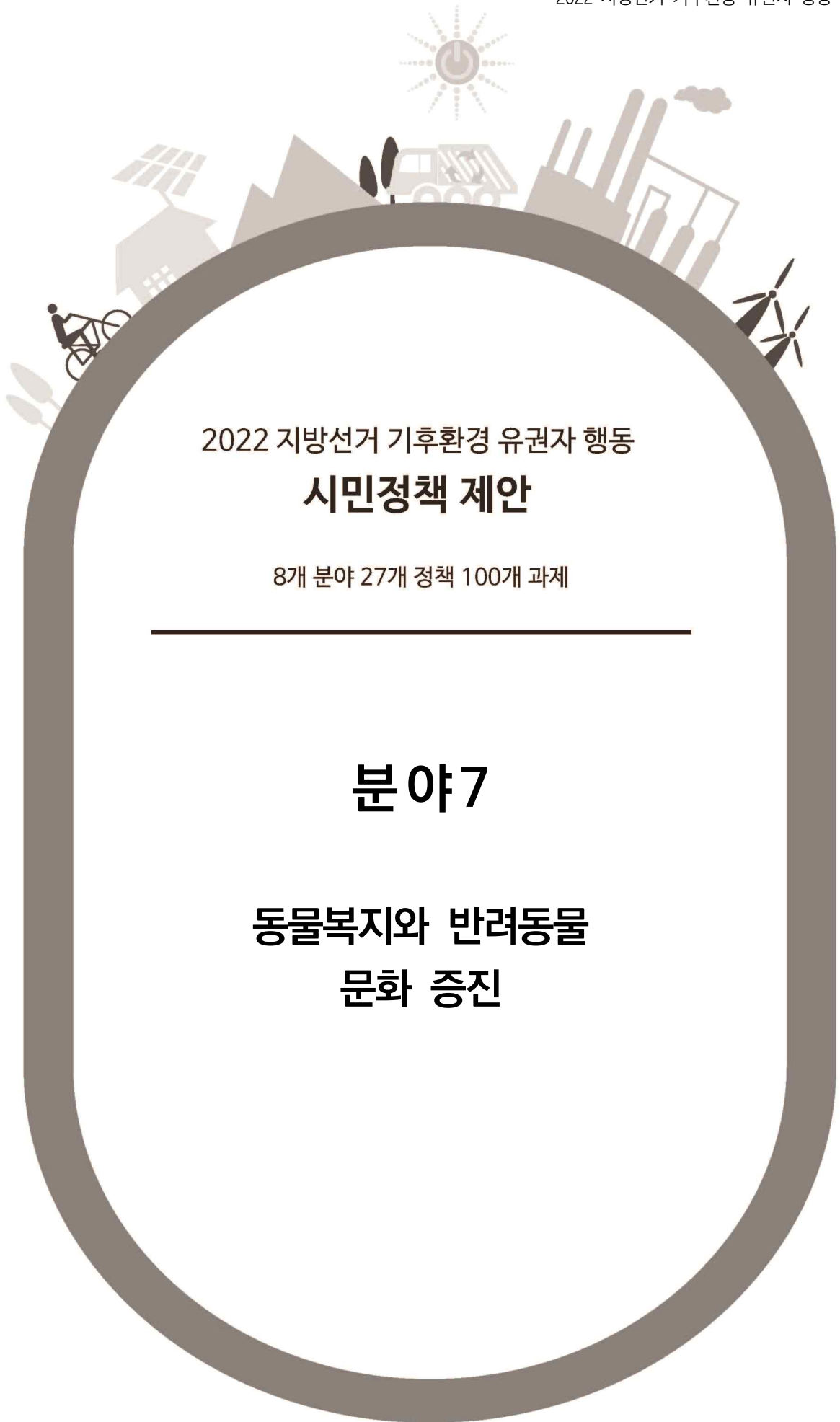
정책	'6-4 야생동물보호구역' 확대와 도시생태 현황지도 활용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																							
목표	도심에서 보기 드문 야생동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표 서식지로 의미가 큰 곳이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을'야생동물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생물 다양성을 높인다.																							
제안 배경	- 환경부는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확보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각종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보호지역은 10개 법률, 21개 보호지역(세부 유형 포함)으로 육상 12.6%, 해양 1.41% 차지함(중복면적은 제외함). 2030년까지 육상보호구역을 17%로 늘린다는 계획임. - 이 중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전국 379개소 중 전라북도 44개소로 11.6%의 비율을 보임. 면적은 전국 총면적 946.916㎢ 중 전라북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91.916㎢로 9.7%를 차지하고 있음. 2008년 전주천 수달이 발견된 이후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맑고 건강한 물의 지표종 수달을 보존,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로드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래 표, 전주시 지정 현황을 보면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지역이 3개소, 전체 면적이 0.23㎢ 에 불과함. 보호 대상 종은 흔히 볼 수 있는 종으로 건지산과 우아지구 등 도시 공원 지역에 형식적으로 지정 관리 되고 있음. 전주시는 수달, 삿, 흰목물떼새, 맹꽁이, 큰고니,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과 늦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백로 왜가리 서식지가 하천 습지와 도심 녹지에 분포하고 있어 이런 서식 현황 특성을 야생동물보호구역지정에 반영해야 함 <table><tr><th>고시번호</th><th>고시일(기간)</th><th>소 재 지</th><th>면적(㎢)</th></tr><tr><td colspan="3">전라북도 : 44개소</td><td>91.916</td></tr><tr><td>전북 전주시 제2008-98호</td><td>2008.11.20~해제시</td><td>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1-1(어린이회관앞산)</td><td>0.0300</td></tr><tr><td>전북 전주시 제2008-98호</td><td>2008.11.20~해제시</td><td>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2-1(건지산지구)</td><td>0.1000</td></tr><tr><td>전북 전주시 제2008-98호</td><td>2008.11.20~해제시</td><td>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산299(우아지구)</td><td>0.1000</td></tr></table> 표. 전주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현황				고시번호	고시일(기간)	소 재 지	면적(㎢)	전라북도 : 44개소			91.916	전북 전주시 제2008-98호	2008.11.20~해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1-1(어린이회관앞산)	0.0300	전북 전주시 제2008-98호	2008.11.20~해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2-1(건지산지구)	0.1000	전북 전주시 제2008-98호	2008.11.20~해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산299(우아지구)	0.1000
고시번호	고시일(기간)	소 재 지	면적(㎢)																					
전라북도 : 44개소			91.916																					
전북 전주시 제2008-98호	2008.11.20~해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1-1(어린이회관앞산)	0.0300																					
전북 전주시 제2008-98호	2008.11.20~해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2-1(건지산지구)	0.1000																					
전북 전주시 제2008-98호	2008.11.20~해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산299(우아지구)	0.1000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1. 야생동물보호구역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재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11조~13조) 개정을 통해 도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나 대표성을 갖는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개정
 -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주변 지역은 개발 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 채취 등의 금지,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조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 보호구역 확대 대상지는 △ 전주천 한벽보 상류 일원(수달과 삶, 원앙 서식지) △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도심권 최대 서식지) △ 삼천 반딧불이 서식지 및 복원 지역(신평교 원당교) △ 산성천 운문산 반딧불이 서식지 △ 삼천동 효천지구 백로 왜가리 서식지 △ 예곡시티 백석저수지 큰기러기와 큰고니 서식지 △ 전주천 상류 상관 금개구리 서식지 등
-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은 안내판 설치 및 자연환경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전주시 도시생태 현황지도에 반영.
 - 건지산 백로 왜가리 서식지는 주변의 우수한 식생과 오송제를 연계하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혹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지정 추진(자연환경보전법 34조 관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 백로 왜가리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된 곳은 충청북도 진천군 노원리(천연기념물 13), 경기도 여주시 신접리(천연기념물 209), 전라남도 무안군 용월리(천연기념물 211), 강원도 양양군 포매리(천연기념물 229), 경상남도 통영시 도선리(천연기념물 231), 강원도 횡성군 압곡리(천연기념물 248) 등이다.
- 만경강 신천습지는 별도의 ‘습지보호구역’지정으로 체계적인 관리

2. 전주시 등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에 따른 세부적 활용 기준 마련

- 전주시가 최근 마무리 중인 전주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에 따라 환경생태, 도시계획, 생활환경, 공원녹지 분야 계획 수립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야 함.
 - 환경관련 공간정보 지도 중에서 가장 활용성 높음 (세부적 데이터, 체계적 평가), 경계를 가지는 특정생물의 서식공간이라는 특성이 각종 계획에 활용하기 적합함
 - 법적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비오톱 네트워크 구축,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대응·협업하는 기초 공간자료로 활용, 도시관리계획에서 비오톱 등급보전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기초자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 7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증진**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증진



정책	7-1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 실현
목표	- 반려동물이 부당하게 취급받지 않으며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반려동물 문화 증진 - 동물의 존엄, 공존의 가치, 생명 감수성 확립 및 동물유래 신종전염병에 대한 이해와 원헬스(One Health)의 개념 확립을 위한 교육
제안 배경	【반려동물】 -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직영 ‘21년 유기동물(118,318마리, 전국)은 전북에서 8,673마리가 발생(개:고양이, 6320:2,327). 이중 29%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및 안락사 됨. - 전북 유기동물보호센터 총 26개 중 직영은 2개소. 직영도 개농장과 같은 뜰장에 직원이 사료주며 관리하는 수준. - 대부분 수직구조의 위탁으로 운영되어 열악한 환경과 시설, 안락사 미준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비전문성(2021, 지자체 실태조사) - 예: 정읍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식용개로 유통(2020) - 위탁의 문제점 지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 마련(2022) 및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지자체의 직접 설치, 운영을 권고함 - 동물전담 특수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운영 - 동물보호법은 시대의 요구와 함께 강화되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의 동물학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적용이 안 됨. - 불법 개농장과 개도축이 시내권내에서도 존재하며, 동물 학대 및 동물판매업 등 불법과 위반에 대한 적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반 공무원은 적극적 대응이 어려움 - 전북도는 식육원산지 단속 특사경은 있으나 이외 동물특사경은 없음. - 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짐 - 경기도에 지자체 최초로 2018년에 동물특사경 제도운영, 총 24명(2020) 【동물원】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물원 원장 공모제 및 조직의 효율화 - 전주동물원은 포유류 45종, 조류 45종 등 총 89종 447개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38종, 환경부 멸종위기종 12종, 천연기념물 8종을 확보하고 있음(2022. 3)

- 서울대공원장 2003년부터, 동물원은 2008년부터 개방형으로 서울시 공무원 단기 임명 관행 끝
- 전주동물원 1978년 개장. 2015년도 생태동물원 용역 이전 10여 년간 행정직 8명 원장, 평균근무 14개월로 전문성도, 관심도 없이 있다가 떠나는 직책이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용역에 전문적 원장 공모제 제안 함.
- 용역 이후 동물병원 포함 늑대사 등 11개 동물사 개선 및 신축 완료하였으나 세계적, 현대적 동물원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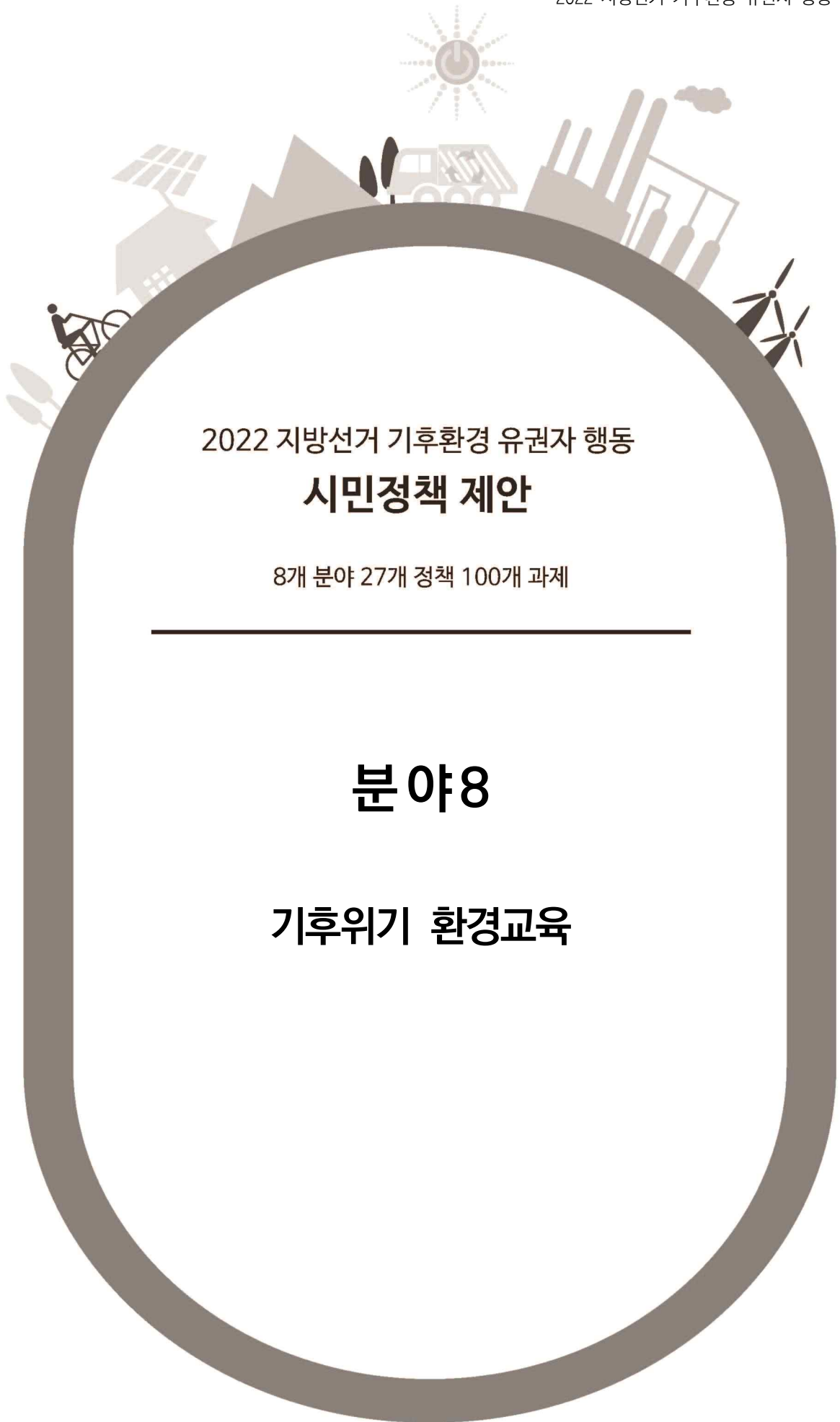
현재 코끼리사, 천연기념물보존관 공사 중.

- 동물원의 공무원은 주요 인원은 수의.축산인력으로 복지환경국 소속이나 인사는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과에서 이동. 동물원이 사람중심의 복지환경국 소속은 맞지 않으며 복지환경국의 인력은 동물원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함
- 조직의 개편과 전문성, 지속성을 위한 원장의 개방형 공모제 도입
 - 동물원 교육관 (혹은 방문자센터) 건립
- 어려서부터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탄생과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 생존, 상호연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관 (혹은 방문자센터) 건립을 제안
- 현재처럼 동물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놀면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스스로 질문, 관찰,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

【교육】

- 동물복지, 생명 감수성 및 원헬스에 대한 교육 시스템 구축
- 반려인구는 증가하나 국내 동물학대 사건은 늘어나나 법적 처벌은 미미하며 지난 10년간 (2010-2019)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는 3,360명 중 구속은 단 4명으로 처벌이 약함
- 동물 학대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연결됨. 동물과 공존과 존중
- 독일 예로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 교육의무이 동물원에서 이루어 짐
- SARS('07), MERS('13), Corona('19~) 동물유래 감염병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간사회 및 생태계 위협. 사람의 감염병 중 60%가 동물유래
- 도시화, 가축 밀집 사육,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감염성 질환 출현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야 함.
- 동물과 더불어 생태계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는 개념의 교육 필요
-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사전교육 및 원헬스를 통한 생태계 이해를 위한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반려동물】 -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직영 - 동물전담 특수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운영 2. 【동물원】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물원 원장 공모제 - 동물원으로 전출입되는 수의축산직렬의 인력의 통일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 동물원 교육관 (혹은 방문자센터) 건립 3. 【교육】 -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사전교육, 생명존중 및 웰헬스를 통한 생태계 교육의 제도를 마련
기대 효과	-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유기동물의 최소화와 특사경 제도를 통한 동물 학대 근절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 동물원 구성의 장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거듭나고, 동물원은 야생동물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코로나 같은 동물유래 인수감염병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물, 자연의 건강이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과 생태계의 건강과 균형이 중요성 기대
근거 출처	- 전주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용역(2015) -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2018) - 전국사군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및 개선 활동 보고서(1차)(2021) - 익산시지속가능협의회 만경강 생태문화하천 프로젝트 제1차 포럼(2022.2.)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임채웅 (010-4948-1782)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문지현 (010-9192-1029)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8

기후위기 환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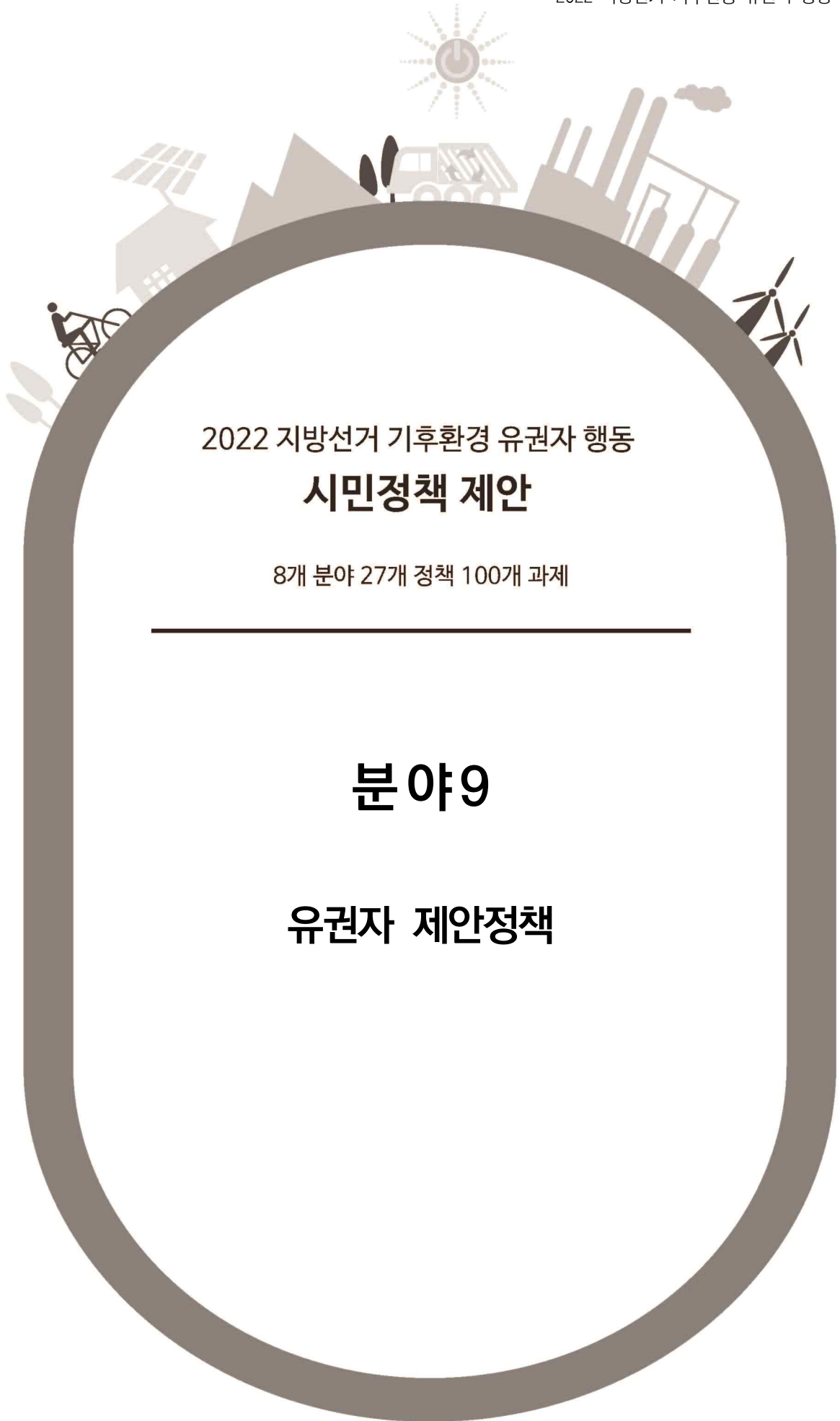


기후위기 생태감수성 환경교육



정책	8-1 환경에 대해 '알고' '해결하고' '누리는' 시민을 위한 기후위기 환경교육
목표	전 세대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전환'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공동체 구성
제안 배경	-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인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환경 보전 뿐 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연결됨 -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6년에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발맞추어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등을 마련 - 환경부는 환경교육 기반 강화를 위하여 국가-광역-기초계획 수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 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하였고, 환경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감이 함께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선언(2020.7.9.)' 공론화와 비상선언문 실천 의지 확산 기반을 구축함 - 환경교육법 제16조로 환경교육 전담기구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간의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범위	☒ 전주시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감 ☐ 기 타
공약 제안	1) 환경교육 기반강화 「환경교육진흥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년 단위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국가 차원에서 지역환경교육계획에 대한 체계적 지표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이행 점검 -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제도와 추진 기반을 갖추어 이행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도시 선언 ※ '20년 지정된 환경교육도시 : (광역) 충남, 부산 (기초) 수원, 성남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및 적극적 기능수행을 위한 체계적 지원미련

	※ (광역센터) '20년 13개 시·도 17개, (기초센터) '20년 4개 시·군·구 25개 - 전국적으로 사회환경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는 4,003개로(환경부, 2019) 파악되었으나, 대부분 운영기반이 열악하여 환경교육 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확인 됨(환경부, 2018). 사회환경교육 기관 단체에 대한 관리 체계 보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환경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2) 모두가 누리는 환경학습권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해 모든 시민의 환경인식 개선 및 사회적 실천과 연계한 환경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교육 의무화 추진을 통한 환경학습권 보장의 기반 마련 -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 기후위기 생태감수성 환경교육 의무화(년 4시간) ※ (대만) 공무원·학생 연 4시간 환경교육, (이탈리아) 기후변화교육 주 33시간의 무화 발표('19), (영국 일부 주) 모든 학교에 기후교육교사 배치 의무화추진. - 교육 기능을 가진 타 기관의 사회환경교육 참여 대상 확대를 통한 시민의 일상적 자발적 환경학습 지원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강화 -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제도를 운영하고 광역 및 기초 환경교육 센터 예산은 별도기금 없이 당해 연도마다 사업예산 편성 ※ (대만) 환경교육법의 강력한 이행 및 재정 지원 명시, (미국) 환경교육기금규정 및 관련법 의거 예산의 10%를 국가환경교육재단(NEEF)에 지원 - 지역환경교육계획(전라북도 제3차환경교육계획)과 학교환경교육계획(2021 환경생태교육 시행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협업 활성화 - 기업 사회공헌의 10%를 환경교육에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 산업분야의 환경교육의무 법제화
기대 효과	전세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학습권 제공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시민 양성
근거 출처	- 환경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2021 교육현안보고서 7호, 기후위기사대,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
문의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고은경 소장(010-2654-3155)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분야9

유권자 제안정책

1.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제로웨이스트화 추진

주제	☐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 구축
제안명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제로웨이스트화 추진
목적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내에서부터 시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배경	시청, 도청, 구청 및 주민센터, 교육청 및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는 민원실, 회의실, 사무실 등에서 아직도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음.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부터 적극적인 제로웨이스트 추진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행사용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할 경우 종이현수막이나 재활용물품 사용하기 2. 화장실의 종이타월, 핸드드라이기 없애기 3. 공공기관 내 카페 및 휴게실 등에서 일회용컵 퇴출, 개인컵 및 다회용기 사용 4. 우산 빗물제거기 필수설치 및 비닐봉투 없애기.
기대효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부터 제로웨이스트 실천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시민들의 실천동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됨.
제안자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모임 “해뜰날” 01086181513

2. 재생에너지 친화기업(업체) 인증제 도입

주제	☐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 구축
제안명	재생에너지 친화기업(업체) 인증제 도입
목적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반기업, 업체, 소상공인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올바른 에너지 소비활동에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함.
배경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주시에는 큰 기업의 수는 적은 편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활동을 독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기업에서부터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했을 경우 시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함. 2.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업체 입구 등에 인증표시제를 시행, 돼지카드에 인증마크 부여함. 3. 인증업체는 공공기관 계약 시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시민이 해당 업체를 이용할 경우 돼지카드에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
기대효과	상업분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한 인식 확대에 기여
제안자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모임 "해뜰날" 01086181513

3. 돼지카드와 탄소포인트의 만남

주제	☐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 구축
제안명	돼지카드와 탄소포인트의 만남
목적	2가지 사업의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배경	전주시의 지역화폐인 돼지카드 사용자들에게 탄소 포인트를 알리고 보다 확대방법 모색 필요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지역화폐로 자리 잡아가는 돼지카드에 탄소포인트제 기능을 추가, 결합하여 추진하여 탄소 포인트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환경(에너지)관련 인센티브제인 탄소 포인트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에 기여.
제안자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모임 "해뜰날" 01086181513

4. 도심형 태양광 확대

주제	□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 구축
제안명	도심형 태양광 확대
목적	도심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로 전주시 재생에너지율을 높임
배경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거나 도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정책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신축시 재생에너지 의무설치율보다 상향 조정하여 재생에너지 설치 2. 미설치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3. 민간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해 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서비스(개발행위 허가,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 시에서 가능한 분야만 추진) 4. 베란다 태양광 물량을 두배 이상 확대하고 기존 용량보다 높은 용량으로 설치 5. 학교 옥상 및 주차장 등 태양광 확대 6. 대형마트 태양광 추진 의무화 및 버스정류장, 공원 내 벤치 등에 미니 태양광 확대
기대효과	도심에서의 올바른 태양광발전 사례를 만들 수 있음, 에너지자립도를 높임, 시민참여 사회적 경제조직 확대 가능
제안자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모임 “해뜰날” 01086181513

5. 기후위기 환경권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제도화

주제	☐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제안명	기후위기 환경권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제도화
목적	탄소중립의 기반이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이뤄질 수 있는 물적 공간의 지원 등의 시스템 마련
배경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부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서의 계획이 필요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환경을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맞춤형 도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기대효과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의 실천방안으로 각 분야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근거 및 출처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안자	한은주 01026385446

6. 기후위기 정기 포럼

주제	☐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제안명	기후 위기 관련 큰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정책에 반영 (몇 대 없는 전기버스를 확장시키기, 자전거데이 등)
목적	전주가 탄소중립 대표 도시가 되어 다른 시의 탄소중립을 촉구할 수 있음
배경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이 '파리협약'을 체결해 기온 상승을 '2도' 내에서, 특히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으며 현재 세계 각국은 '파리협약' 체계 아래서 국가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2050년 전후로 전 세계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포럼 후 아이디어를 반영한 탄소중립 페어를 열어 시민들이 탄소중립 사회를 경험하게 해주기 2. 전주시민들이 탄소중립적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음(전기차사용, 자전거출퇴근 생활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대안 제시 가능) 3. 탄소중립 페어를 열어 탄소중립 사회를 경험하게 해주기
기대효과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귀찮기만 한 과정이 아님을 깨닫고 탄소중립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음
근거 및 출처	파리기후 협약
제안자	이은진 010-8851-7711

7. 전북형 환경교육 정규과목 의무화

주제	☐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 구축 ☐ 기후위기 환경교육
제안명	전북형 환경교육 정규과목 의무화
목적	교육분야의 탄소중립 활동 확대를 위함.
배경	체험학습 및 환경교육이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순 체험 위주의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음.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환경교육이 단순체험학습이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동아리 활동에 머무르지 않도록 환경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의무화하여 대상에 맞게 주 1~2시간으로 편성 2. 대학의 교양 필수과목처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탄소중립과 생태감수성을 높일 수 있음.
기대효과	아동청소년에게 탄소중립과 생태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및 가정까지 확대할 수 있음.
제안자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모임 "해뜰날" 01086181513

8. 그린전주투어 활성화를 위한 “전주버스 탄감 토큰”

주제	☐ 대중교통 활성화 ☐ 기타_관광
제안명	그린전주투어 활성화를 위한 “전주버스 탄감 토큰”
목적	문화관광의 대표 도시인 전주시가 기후위기 시대에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린투어, 생태투어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배경	전주시는 2020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고 국내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관광하기에 좋은 도시임.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과 전주시 내 탄소배출 및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그린투어 대중교통활성화를 독려하는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함.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전주버스 탄감 토큰 : 전주버스 탄소감축, 전주버스탄는감? 의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 2.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시에 방문한 시민에게 전주시 대표 이미지 (부채, 수달, 쉬리, 풍남문 등-지역작가 참여)를 활용하여 만든 토큰을 기념품 및 인센티브로 제공, 3. 대중교통을 이용 전주 방문객에게 간단한 인증을 통해(관광앱 또는 버스앱 등 활용) 전주토큰을 지급하고 이 토큰을 받은 사람은 전주시내 버스 무제한 무료 1일권(또는 0회)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탄감토큰은 NFT전자토큰방식 또는 앱활용하여 지급하는 방식 또는 기념주화처럼 만들어서 지급 가능, 관광객용 돼지카드를 앱으로 발급-토큰과 연동하는 방법도 가능 5.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에 투자 인증된 업체를 이용할 경우 돼지카드나 토큰에 포인트 추가 지급하여 대중교통 이용한 전주 재방문을 유도함.
기대효과	전주만의 특색있는 인증 및 인센티브로 모객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독려하는 그린투어 활성화, 탄소배출 감축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안자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모임 “해뜰날” 01086181513

9. 지역 로컬푸드 무포장 시도 및 자원순환 시스템 제도화

주제	☐ 자원순환
제안명	지역 로컬푸드 무포장 시도 및 자원순환 시스템 제도화
목적	현재 완주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였지만, 농산물 생산자가 무 하나까지도 모두 개별 플라스틱 포장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량이 심각함.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무포장 시도 및 활성화되어야 함. / 완주군은 자원순환조례를 만들었으나, 이를 실천하는 현장이 부족함. 구체적인 현장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측과 생산자, 소비자와 함께 무포장으로 전환을 시도하여, 제로웨이스트 및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배경	- 소비자로서 플라스틱 포장이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 및 분리수거의 어려움. - 타지역의 로컬푸드는 무포장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완주로컬푸드는 조직적인 노력이 미흡함.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완주군 자원순환 조례를 적용하여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측에 적용하는 내부 지침 및 기준 마련. (무포장 전환 로드맵 설계) 2. 완주군 로컬푸드 직원, 생산자, 일반 소비자 플라스틱 포장(쓰레기 및 자원순환) 인식개선 교육 진행하여 공감대 형성 3. 완주군 로컬푸드 측에서 생산농가에 보급하고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회용기 제작 및 보급 4. 완주로컬푸드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마련(무포장 농가 지원 및 여론 수렴) 하여 무포장 품목 지정 및 이를 완주군로컬푸드에서 무포장 농가 판매 수수료율 인하 등 인센티브 정책 지원 5. 매장 내 다회용기, 다회용장바구니 비치 및 소독기 설치 6. 지역 내 다회용기센터 설립
기대효과	로컬푸드 관계시장의 생태성적 가치 및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 무포장 전환으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감소, 쓰레기 발생을 저하/ 다회용기 제작으로 인한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근거 및 출처	2022년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진주로컬푸드 소희주 대표 인터뷰 진행 및 자료 참고
제안자	소해진 플랜트엑트(여성환경행동 말랑지구& 프리데코) 010-3211-0133

10. 로컬푸드 포장지 분리수거 쉬운 관리

주제	☐ 자원순환
제안명	로컬푸드 포장지 분리수거 쉬운 관리
목적	분리수거가 생활화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배경	늘 분리수거 한다고 가격표 비닐포장지와 분리하느라 씨름하지만 쉽지 않아 소각용으로 버리고 있고 양이 많음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완주-전주 로컬푸드의 비닐 포장 시 네임태그를 떼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같은 비닐로 태그를 붙여 판매 하여 소각용 쓰레기로 나가지 않고 바로 비닐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함
기대효과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늘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음
제안자	김양숙 010-7203-1190

11. 시민의 도시공원 생활화

주제	☐ 녹지와 도시공원
제안명	시민의 도시공원 생활화
목적	체계적인 수도시 공원관리를 위해 민간협회 구성
배경	녹지환경의 중요성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민간협회와 전주시가 협업하여 정책수립추진
기대효과	전주시민의 녹지공원에 대한 자부심
제안자	정순아 010-3463-2700

12. 기후시계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기후위기 대응

주제	☐ 기후위기 환경교육
제안명	기후시계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기후위기 대응
목적	1. 기후위기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민들과 행정 모두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기후시계를 이용하여, 전주시민들이 어디서나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	1. 현재 당면한 다양한 사회, 환경 문제들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 위기이다. 그러나 일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민들과 공공행정기관들은 이를 진정한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2.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시계를 이용한 시민공론화로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인식하고, 일상 속 변화를 통해 기후위기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알릴 필요가 있다.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주요 공공기관 대형 LED 기후시계 설치 : 전주시청사, 구청의 광장 또는 건물외벽에 대형 LED 기후시계를 설치, 국제적으로 기후시계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ClimateClock과 국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헤럴드와 협력하여, 전주시 주요 공공기관에 기후시계를 설치하고, 헤럴드와 국내외 언론보도 및 공론화 캠페인을 함께 진행. 1.5C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카운트 다운형식으로 표시. 2. 주요 공공기관 기후시계(시간) 안내 방송 진행 : 현재 전주시청사는 코로나 안내방송과 정시퇴근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기후시간을 알려주는 방송을 통해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업무내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3. 주요 사거리 미니 기후 시계 설치 - 신호등 위 : 전주시 도심내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승용차 이용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차량이 가장 많이 대기하는 주요 사거리에 미니 기후시계를 설치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

	4. 교내 기후시계 만들기 및 설치 진행 : 초중고 학교에 미니 LED 기후시계를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미래세대의 주인공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후시계를 만들어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기후위기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
기대효과	1. 기후시계라는 직관적인 시각정보를 통해서, 기후위기가 현실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음. 2. 주요 공공기관과 사거리, 학교 어디든지 기후시계를 볼 수 있게 하여, 효과적으로 시민공론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3. 천만그루정원도시, 탄소중립 사업등 과 연계 되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음.
근거 및 출처	- 기후시계 정보 : www.climateclock.com - 국내 기후시계 캠페인 정보 : 헤럴드
제안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민재 010-7744-1955

13. 5살부터 환경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주제	☐ 기후위기 환경교육
제안명	5살부터 환경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목적	환경의 중요성을 어릴 적부터 인지시켜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보호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어요
배경	유치원, 초. 중, 고등 정규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환경 수업을 하고 몸소 환경지킴이 활동하게 한다. 지금 하고 있는 환경수업은 따로 과목이 없어 중요성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환경문제를 체감하기 어렵고 환경 개선을 고민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제안범위	☐ 전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 ☐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전라북도교육감 후보 ☐ 기타
정책제안 세부사항	1. 환경 과목 개설. 2. 법으로 수업시간 정하기. 3. 수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직접 활동 4. 아이들 스스로 환경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 시간 배정 5. 한 학교에 환경교사 배정 또는 환경 운동가, 환경 강사 파견해서 강의
기대효과	꾸준한 교육이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이어져 아이 스스로 실천하고 발전한다.
근거 및 출처	
제안자	김근혜 010-9922-944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13개 유권자 제안정책)

부록

- 활동개요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활동개요
부록1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부록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워크숍 및 시민정책 공모
부록3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시민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jicsd21/222706896845>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내려받기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활동개요



□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3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전주시청 노송광장

- ¶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취지
- ¶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활동계획안 발표
- ¶ 퍼포먼스 '기후환경 정책맛집, 문을 열어요'
-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 ¶ 질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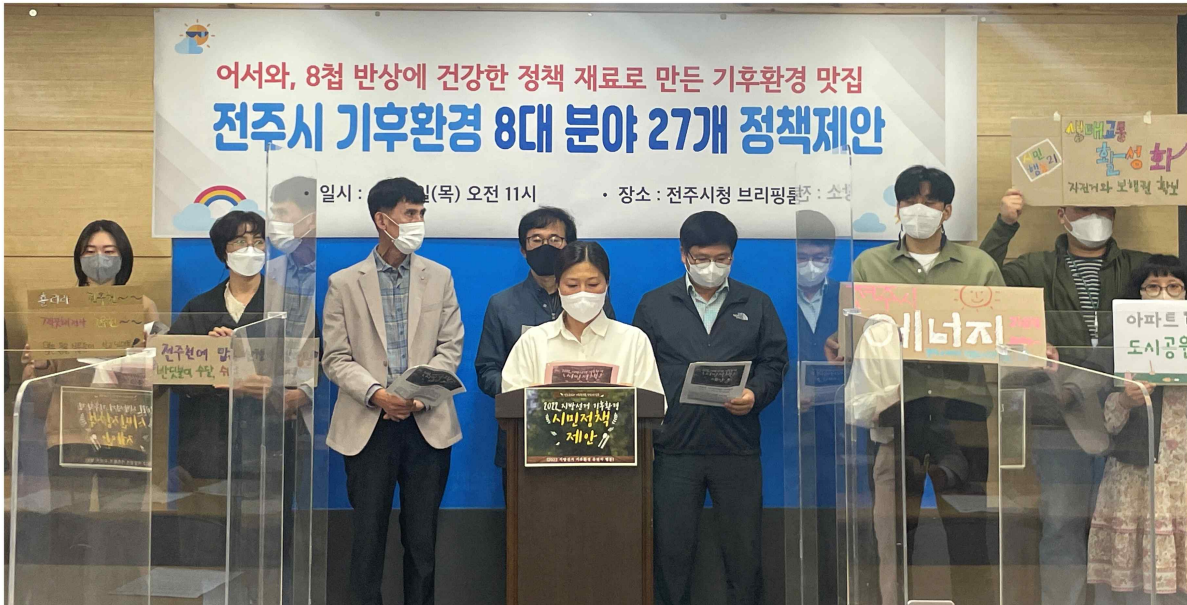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환경시민단체와 민관협치 단체들이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 과제를 지역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과 에너지전환',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전', '시민 건강권 확보' 등 기후환경 의제가 부각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가고자 유권자 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 활동개요

일정	활동계획안	비고
2.21 ~ 3.15	-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제안 - 행동 발족 준비회의 (2회차) - 유권자행동 발족식 및 시민정책 공모	
3.16 ~ 4.20	기후환경 정책 주제별 워크숍 - 기후위기 탄소 중립 사회 구축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쓰레기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로 - 도시의 쉼표 녹지와 도시공원 -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 기후위기 환경교육	기후환경 이슈 8가지 주제 릴레이 정책워크숍 현장 정책협약 내부워크숍 간담회 등
4.01 ~ 5.31	- 시장 후보자 환경정책 공약수용 및 현안 질의	
	- 시장 후보자 환경정책 협약식	
	- 지속가능한 전주를 위한 후보자 공약 모니터링	
	- 전라북도·도교육청 환경정책(교육) 정책제안 - 후보자 공약 검증 및 평가 활동	
6.01 ~ 선거 이후	- 당선인 환경정책 과제화 추진	

✧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퍼포먼스 ✧
✧ 기후환경 정책 맛집, 문을 열어요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희망을
촛불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 기후환경 정책맛집, 문을 열어요 ”

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당면과제들과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대선은 ‘묻지마 정권교체’라는 선거 구호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정책 대결은 뒷전이고 ‘대장동 사태’, ‘주술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 등 가십과 폭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강국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반대,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목표확대 반대 등 반(反)환경 정책과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토목사업으로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이 같은 공약으로 볼 때 기후환경 정책은 더욱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약들이 다 지켜질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어렵게 합의한 정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생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희망을 지역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환경시민단체와 민관협치 단체들은 3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이하,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을 발족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 과제를 지역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전’, ‘시민 건강권 확보’ 등 기후환경 의제가 부각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은 참여 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8차례의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정리한 정책과 공약을 전주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 제안 수용 여부와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 내용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합니다. 후보자들과 정책협약 체결을 통해 이행 약속을 받고, 후보자의 공약을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춰 평가해보고, 선거법이 허용하

는 선에서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책 대결을 통해 전환 시대에 맞는 유능하고 참신하며 소신 있는 단체장 선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172석을 가진 거대 여당임에도 촛불 시민이 위임한 정치개혁과 현안과제 추진에 미적대다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적은 표 차이로 패배한 것에 안도하며 뼈를 깎는 쇠신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도 필패입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다당제 구조로의 정치 교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권력을 독점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한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는 전북지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춰 풀뿌리 자치의 의미를 살려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에 대한 엄격한 공천 기준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정책을 다두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가장 앞선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구도를 넘지 못한 아쉬움도 큼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지역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정책과 공약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모든 예비후보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지역 사회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정책과 공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기후환경 공약으로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호남의 민주당 유력 후보들은 비법정 언론 토론회나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답변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오만한 처사입니다. 유권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입니다. 아름다운 정책선거를 만드는데 유권자 행동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함께 알아보고, 해결방법을 찾고, 어떻게 정책화할지 지원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개혁 과제와 기후환경 정책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은 현실성 없는 개발 공약이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쓰레기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도시공원, 미세먼지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후환경 의제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 3. 15.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일동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기후환경 정책 맛집, 릴레이토론회

이곳은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이 운영하는

기후환경 정책맛집

운영기간 3월 30일 ~ 4월 20일
시그니처 메뉴 탄소중립 12첩 반상
예약문의 063.281.2959 | 063.286.7977

(사)생환경미래운동
덕천노인복지관
시민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환경발전협의회
전주시에너지전환시민포럼

(사)전북생태자연
덕천지역자활센터
배드민턴사회복지지원기관
전주YWCA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전주시로차지사회복지지원기관

(사)무문전주
생태교육센터 "솔바" / 생태교동시민행동
전주에너지연구소환경운동본부
전주생태자연연합회
전주사회혁신센터
전주시에너지전환시민포럼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생태교동시민행동
전주에너지연구소환경운동본부
전주생태자연연합회
전주사회혁신센터
전주시에너지전환시민포럼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기후환경 정책맛집 릴레이 토론회 첫번째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 구축

6월 지방선거, 지속가능한 전주를 위해 기후환경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논의되고
후보자에게 제안되어 수용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
3.30.wed
오후2시

장소 옥성 1층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
문의 전주시(에너지센터) 063. 905, 4103

- 최장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발제 1. 전주시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체계 제안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 전주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장
3.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안
김효준 전주시-이클립 관장

토론 장남정 전북연구원 연구원
조미정 전주시민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소영식 전주시도시혁신센터장

주관 전주시에너지전환시민포럼 | 후원 에너지가능발전협의회 | 전주사회혁신센터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전주에너지센터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정책맛집 릴레이 토론회

성장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6월 지방선거, 지속가능한 전주를 위해 기후환경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본은 도시계획에 대한 원칙과 방향입니다. 우리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도시계획 정책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4월 8일(금) 오후 2-4시
장소 / 옥성 1층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

주제발제

발제 1.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위한 제안
오 창 환 생태도시민행동연구소 / 민간대표 / 전북대학교 교수

발제 2. 성장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을 위한 제안
박 정 원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 / 도시계획기술사UB 소장

발제 3. 전주 현안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안
이 정 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 활동가

토론

전 정 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정 수 경 김계문도시연구소 대표
박 성 레 천안그루점원도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종합토론 좌 장 / 태리명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정책연구원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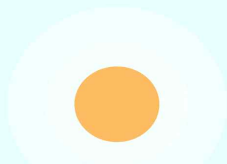
온라인 중 *

녹지분야 토론회

4.19 (화)
10~12시

* 발제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 사례 [맹지연 박사]
도시가 정원이 되는 전주 [최현규 운영위원장]
자연환경 총량제를 통한 그린웨이 구축 [장래익 교수]

* 토론 도시공원 지키기 [김재병 사무처장]
정원도시사업 지속 추진 [하광주 관장]
도시숲총량제 제안 [유지은 사무국장]



#기후환경정책맛집 #도시공원 #온난화식목일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숲을 만들어요

2022년 4월9일(토) 오전10시 인후공원 공영주차장



(덕진구 우아동 3가 산 111-3 공영주차장 집결)

참여방법 | 나무후원 및 나무심기 봉사 ● 후원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 봉사시간 인증

🌿 나무1그루 후원계좌 : 전북은행 520-13-0336418 전북환경운동연합

🌿 교목 1그루 5만원 🌿 관목 10그루 1만원

🌿 나무심기 준비물 | 나무심기 편한복과 텀블러에 물은 꼭 준비해주세요.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4172.3405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성함, 참여인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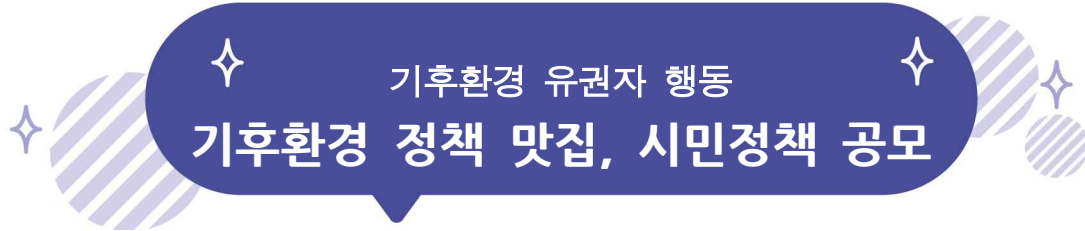
주요내용 | 온난화식목일 의미설명, 올바른 나무심기 방법 교육

문의 | 063.286.7977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1.2883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3.286.6161 시민행동21

주최 |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행동2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탄소중립과 기후환경을 맛있게 담은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맛있는 정책공모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 탄소중립과 기후환경을 정성껏 담은 여러분의 맛있는 정책을 공모 받습니다. "



참여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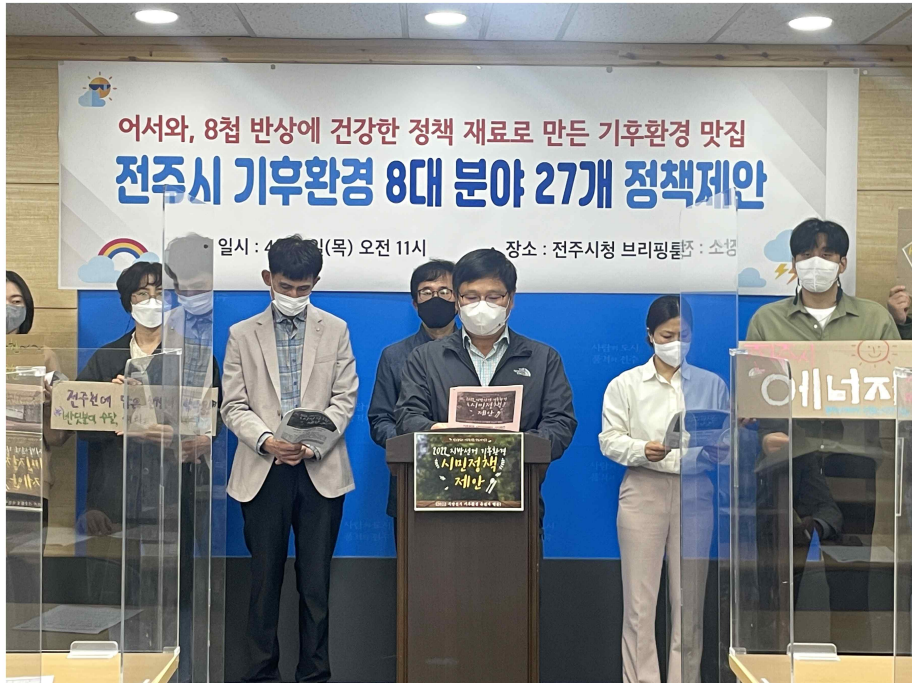


참여대상 전주시민 누구나	마감기한 4월 15일	참여방법 QR접속	정책선정시 소정의 상품
------------------	----------------	--------------	-----------------

문의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063-281-2973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시민정책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주시청 브리핑룸

- ㉠ 지방선거 기후환경 정책제안 취지 및 경과보고
- ㉠ 기후환경 정책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8개 분야 27개 정책)
- ㉠ 질의 응답

지구의 날을 앞두고,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은 3월 22일과 4월 9일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천 국가하천 자연성 회복과 도시공원 지키기 현장에서 2차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민관협치기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제를 중심으로 4번의 내부 워크숍과 3번의 토론회를 거쳐 8대 분야 27개 정책 94개 과제를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jjcsd21/222706896845>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내려받기



시민사회가 직접 재배한 건강한 재료로 만든 기후환경 정책맛집

**4차례 내부 워크숍, 3차례 토론회, 2차례 환경현장 협약을 거쳐 마련한
기후환경 8대 분야 27개 정책 94개 과제를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제안합니다.**

4월 22일은 1970년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지구의 날'입니다. '또 하나의 지구는 없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52년이 지난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 등으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국제네트워크가 정한 올해의 주제는 '지구에 대한 투자(Invest in our planet)'입니다. 전 세계가 약속한 기후위기를 넘어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너나없이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전환 정책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은 다자 경쟁 구도 속에서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며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민하고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반가운 공약들도 있습니다. 초고층 타워, 케이블카, 도로 확장 등 지역 개발 심리에 기댄 공약도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의 미래, 지역에서 시작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기후환경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은 3월 22일과 4월 9일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천 국가하천 자연성 회복과 도시공원 지키기 현장에서 2차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민관협치기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제를 중심으로 4번의 내부 워크숍과 3번의 토론회를 거쳐 8대 분야 27개 정책 94개 과제를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제안 분야와 정책은 △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전주시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전주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탄소중립 노인 일자리 창출제안)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추진체계 강화, 성장을 관리하는 도시계획 제안, 지역 단위별 성장전략 생활권계획 수립, 대한방직 공론화 권고문 존중과 종합경기장 재생 종합적 검토) △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자전거-보행 연결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공영제 도입 및 서비스 개선,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 도입,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축) △ **자원순환 경제 도시** (우리동네 자원순환 거점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농산어촌 자원순환마을 확대 조성, 미세먼저·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사업장쓰레기 매립 소각시설 공공성 확대) △ **도시의 쉼표 녹지와 도시공원** (전주 도시공원 사유지 적극 매입, LH의 가련산 아파트 건설 계획 중단, 이해충돌 배제하는 도시공원시민협의체 구성, 도시 숲 총량제 도입, 가로녹지 및 보호수노거수의 체계적 관리 강화, 정원도시 사업의 지속 및 유지관리 활동 지원) △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전주천 국가하천 자연성 회복과 수질 개선,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 에코시티 백석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야생동물보호구역 확대) △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 실현) △ **기후위기 환경교육** (환경에 대해 알고 해결하고 누리는 시민을 위한 기후위기 환경교육)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가치 지향을 담은 중장기 정책과 쟁점 현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정책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도입 가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천 공약도 담았습니다. 후보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공약에 담아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은 정책제안 중 지역 사회의 개발 쟁점 현안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기후환경 정책 수용성과 공약 반영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보자들의 공약 평가를 통해 좋은 공약, 나쁜 공약, 친환경 공약, 난개발 공약을 가려내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전환 시대에 맞는 유능하고 참신하며 소신 있는 단체장 선출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환경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후환경 의제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 4. 21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 행동 일동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시민정책 제안

8개 분야 27개 정책 100개 과제
(13개 유권자 제안정책)

구분	기후환경 8대 분야	정책	과제
1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3	15
2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4	20
3	대중교통 활성화	4	10
4	쓰레기 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로	4	20
5	도시의 쉼표 녹지와 도시공원	6	15
6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4	14
7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1	3
8	기후위기 환경교육	1	3
합 계		27	100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사)생명평화마중물 | (사)전북생명의숲 | (사)푸른전주 |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 더귀하게
덕진노인복지관 | 덕진지역자활센터 | 비글구조네트워크 | 생태교육센터 "숲터" | 생태교통시민행동
시민행동21 | 어독스 | 에코울림사회적협동조합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전북YWCA협의회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 전주시니어클럽 |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사회혁신센터 | 전주에너지센터 |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상 26개 참여단체명 가나다순)



공동집행위원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010-3689-4342]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태리명희 010-2340-8296]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jjcsd21/222706896845>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시민정책 제안집